

제43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24일(월)

장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종합정책질의

상정된 안건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3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3
 - o 소위원장(유상범) 인사 3
3.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4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4
 - 종합정책질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과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인사를 못 하신 배준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 박정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원 원주시갑 출신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우리 이광재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간사분들 말씀 잘 들어서 국가재정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 박수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평소 친분도 있는데 잘 모시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 엄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예결위에 작년 한 해 쉬고 또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간에 큰 충돌 없이 결산심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총리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총리님의 아주 고견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반갑습니다.

경북 김천 출신 송언석입니다.

다시 예결위 회의장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낮익은 얼굴들도 보이고 좋습니다.

예산은 돈으로 나타낸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 미리 드릴게요.

예산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동안에 위원장님 국회의 이력도 있고 살아오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품을 이번에 충분히 발휘해서 가지고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그게 다 예산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 심사해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잘 제출을 안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반드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 특활비 이런 부분들, 한때는 청와대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그거 없다고 국정이 안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돌아서서 추경에 그냥 밀어 넣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특활비 확보했는데 특활비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즉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언석 위원님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정태호 간사님하고 유상범 간사님께서 멋진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 등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훈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윤국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이규민·민성철·윤성노·유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광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를 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속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유상범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소위원장(유상범) 인사

(10시10분)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방금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상범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결산은 예산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결산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함께 저희들이 2027 예산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유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으며, 부별 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종합정책질의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어렵습니다. 비판과 대안이 함께 논의되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배워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에게서 배우고 야당은 여당에게 배우고, 공직자는 국회에서 배우고 국회는 공직자의 경험에서 서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에는 부모가 많고 실패는 고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모두 자신의 공이고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도 함께 나누고 실패도 함께 책임지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결산 국회가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기는 토론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당이 이기는 국회도 아니고 야당이 이기는 국회도 아닙니다. 국민이 이기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왜 못 했습니까’라는 질문과 더불어 ‘그렇다면 이렇게 해 봅시다’라는 대안까지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청하고 참고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정하는 자세야말로 가장 위대한 용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에게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생기고 아마 최초로 바깥에 가면 다과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뒀습니다. 오늘 첫날은 유상범 위원님 지역구에서 온 음식으로 준비를 해 뒀습니다. 서로 날카롭게 질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고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국민이 이기는, 답을 찾아 나가는 국회 그런 국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8월 26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8월 31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8월 26일 회의 산회 시

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8월 31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여야 됩니다.

특히 위원들의 서면질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신 줄 잘 압니다. 예결위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당 간사님들께 양해를 받드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의논하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부별심사까지 우리 위원회의 전 일정이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673조 3000억 원의 본예산과 더불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서 45조 6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주권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서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서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물가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달성하는 등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 3특, 지역균형 등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당초 의도한 정책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수용해서 향후 재정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출 호조와 신속한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과 경기 활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는 건조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성장 경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밝혔듯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3·4·5 비전, 즉 잠재성장을 3%, 수출 세계 4강, 5만 불 국민소득 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전환 대응, 양극화 해소, 규제 합리화, 경제구조 혁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초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597조 9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600조 원보다 2조 1000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591조 원이며 예산현액 604조 7000억 원 중 97.7%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6조 9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감소 등으로 계획보다 22조 원이 감소한 971조 3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37조 4000억 원에서 총지출 684조 1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7조 원이 늘어난 1268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의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5조 2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5조 원 늘어난 3593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6조 3000억 원 증가한 2772조 원입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8조 8000억 원 증가한 821조 500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선거 등을 위해 예산 3조 8000억 원 중에서 3조 20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앞 부분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결산 총괄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에 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소비심리 개선,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분기 0.6%, 3분기 1.4% 성장하는 등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고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집행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신속 집행 경기대응 효과와 이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집행 규모와 추진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수입 관련 검토입니다.

2025년 세수재추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오차가 발생한 세목들을 면밀히 분석해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일몰

기한 연장 제한 등 조세지출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연말 국고금 부족 관련 검토입니다.

2025년 말 국고금 통합계정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일부 사업 예산을 2026년으로 사고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후 2026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재정 운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첫째, 3조 7000억 원 규모의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인한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했고—23쪽 상단입니다—둘째, 정부는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에 대해 보수적으로 산정했으며 셋째, 공자기금 연말 여유재원을 소진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쪽 이하 4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검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금화 필요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회 심의 없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기관 결산 검토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조직 규모 관리, 자격 검정 관리·감독 체계 개선, 결원 해소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7쪽 상단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복리후생과 인사 관리를 지침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책펀드 사업 검토입니다.

2025년 정책펀드 사업은 15개 부처 26개 세부사업에서 총 2조 309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책펀드는 정부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임에도 일부 펀드는 공공부문 출자 비중이 높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모태펀드 중 일부 자펀드는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공공부문 자금 출자 비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 투입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최소한 정책자금 출자 비율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인공지능 관련 사업 검토입니다.

2025년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39개 부처 360개 사업에서 총 5조 9735억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GPU 구입과 활용에서 사업의 추가적 지연을 예방하고 GPU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GPU 자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검토입니다.

현재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다수 부처가 분산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총괄 기관이 부채하고 사업 역시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재정제도 개선과제입니다.

정부는 결산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조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여부를 추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동 건에 대한 조치 완료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결산심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4쪽 이하에서는 보고서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께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존경하는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7조 9000억 원, 세출결산액은 591조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971조 3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조 2000억 원 증가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미수국세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 등 총 9조 4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지급비용에 대한 부채 계상 누락 등 총 4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한 자산은 3593조 4000억 원, 부채는 2772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3조 4974억 원이 과소 계상, 물품은 75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한 국유재산은 1402조 7000억 원, 물품은 17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1268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1141조

2000억 원에 비해 126조 9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전년 대비 2.9%p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613조 3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5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입니다.

구 기획재정부 등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14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에 143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49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등 15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들에게 처분을 요구한 212건 중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92%에 해당하는 19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인 1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17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변상판정이 1건, 징계요구가 12건, 시정요구가 2건이고, 주의 및 개선 요구가 2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의 임이자 위원님의……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예,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후에 정쟁보다는 공부와 토론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부와 토론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민주당이 검찰이랑 대통령실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사 장애를 이유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기관들도 같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은 헌법 제55조 2항이 우리 위원회에 맡긴 권한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단 1건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도 2023년에 실명 같은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 세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한도 가능한 금일 오후 2시로 한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승인심사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도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형적 리밸런싱 유예는 외국인만 149조 원을 팔고 나가게 만들어 환율 급등을 초래했고 글로벌 IB 바클레이스조차 연기금이 변동성 증폭기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도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 직후 10년 분산 투자 원칙이 무너진 만큼 현재 기금의 사유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실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중대한 실책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공개 열람을 전제로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등 정부 유관 기관과의 사전 협의 내역, 리밸런싱 유예 당시 외환시장 영향 시뮬레이션 보고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정상화 로드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고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 자료를 금일 2시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재 같은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배준영 위원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른 얘기입니까?

배준영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출석을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추경안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이 중요한 틀을 잡고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책임은 장관들이 다 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에서 확인된 정책 실패와 재정낭비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와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은 꼭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강훈식 실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후에는 정책실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결산 때 장하성 정책실장님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님이 나왔던 예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하시지요.

○서지영 위원 자료제출……

○위원장 이광재 간단히 해 주시지요.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자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이야기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산자위에서 장관께서는 다양한 부지를 기업에 추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광주로 선정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지별 검토 자료나 어떤 다양한 부지를 사전에 제공하였는지, 검토하여 기업에 제공하였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장관께서는 당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차관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업에도 제공한 내용을 왜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산업부에서 검토하셨던 다양한 부지가 어디인지 그 부지별 검토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중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전선에 뛰고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루아침에 면직 처리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면직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감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은 국회의 내실 있

는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은 성실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임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의 건은 정태호 간사님하고 양당 간사님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재** 일단 여기 좀 하고 하시지요.

○**송언석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시지요.

○**송언석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리께서 감사원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 설명에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195건 조치 완료, 나머지 17건 조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재정경제부 자료가 첨부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변상’ 그다음에 ‘징계’, ‘시정’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주의’가 있는데 뒤엎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에 ‘변상’과 ‘징계’와 ‘시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이행 완료됐다면 언제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그리고 이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부분은 가급적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얼른얼른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경북 상주·문경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님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정책위의장입니다.

지난 8월 21일 날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기획예산처장관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임이자 위원** 정부가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100조 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AI, 첨단산업과 미래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서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기금은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도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출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미래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서 심사를 받으면 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는 정규 추경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

칙입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조차도 미래 대응의 탈을 쓴 기금이 정부의 자의적 재정 집행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래, 청년, 지방균형발전 등 그럴 듯한 간판을 내걸고 선심성 현금 살포나 부처 간 나눠먹기식 혈세를 탕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빙자해서 국회 통제를 피해 가려는 꿈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100조 원대의 거대한 국가 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기존 예산 체계로는 왜 불가능한지, 100조 원대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물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임이자 위원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면 결산에 집중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묻지 않는데 불필요한 대답 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이 지금 줄어듭니다.

강훈식 실장님 나오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아, 거기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나갈 데가 있습니까?

○임이자 위원 없네요.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위원님,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안 오나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지금 특활비 집행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결위 간사를 해 봤습니다만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들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여야가 서로 정권 교체를 해서 공수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활비가 음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속에서 여당은 야당에게서 배우고 국회는 공직자들에게 배우고 야당도 여당에서 배워야 되고 공직자도 국회에서 배워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비서실장님 골프 정치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던데……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제가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정치 안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정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프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정치 안 하시면 문제인데.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제가 정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하고 골프를 성사시켜서 골프 한번 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의 개인 일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것은 좀 제한됩니다.

○**임이자 위원** 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개인 일정이예요, 매스컴에 다 나와 있는데? 골프 쳤다고 사진도 다 나왔더구먼. 그게 충성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골프 치셨는데 골프 친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들이랑 계속 치실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사비로 치신 겁니까, 아니면 특활비로 쓴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어느 비목으로 들어갑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글썄, 개인 일정이니까 사비로 썼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제한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비서실장은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저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영역과는 다른 영역의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 일정까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골프를 치시거나 이럴 때 개인적인 친목으로 해서 칠 때는 어떤 비목으로 처리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이미 드린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모릅니까 그거지요? 모르겠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항상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그냥 답변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강훈식 실장님, 우리가 예산결산 하는데 예산은 쓸 돈에 대한 허가고요 결산은 쓴 돈에 대한 책임입니다.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국회 지금 3선 하셨고 또 예산결산에서도 일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회에 자료제출은 128조 그다음에 국회중감법 제2조에 의해서 자료제출은 꼭 하도록 돼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을 함에 있어서 결산심사는 우리가 왜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결산심사의 이유,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작년엔 썼던 돈을 결산에 감사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썼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그 책임 속에서 개선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아까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정, 변상, 징계, 제도개선 이런 부분으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제대로 와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제출을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특활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이자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특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와 투명성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기에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특활비라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국민들 공분도 많이 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당 저 당 막론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마다 특활비에 대해서 너무 캄캄이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물론 그때는 기획재정부지요. 기재부의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아니면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좀 보여 주십시오, 2025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침.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물론 비공개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해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또 보게 되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중앙관서의 장들은 예를 들어서 집행내역서를 생략하거나 이래야 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청와대도 해당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그것을 모르고 나와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청와대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특수활동비건 업무추진비건 저것은 관서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안입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직접 영수증을 증빙해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선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지급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영수증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쓸 수…… 국가 정보 그다음에 범죄사건 수사 이런 부분들이 노출됐을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현저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관서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특활비는 알다시피 적용범위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안보·경호 이런 국정 수행에 필요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장관께 묻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수증을 붙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범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절차들을 밝힐 수 있도록 그것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이미 집행일자, 집행명목, 금액 이것은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최초로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임이자 위원 그럴까요? 한번 보시지요.

집행내역들을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집행내역들 보게 되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그냥 집행일자, 유형, 집행명목, 금액 이렇게 통쳐 가지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용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대국민 격려, 9200만 원 썼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기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위원님, 총 다섯 가지 분야로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네트워크 관리나 구축에 있어서 또 민심 청취나 갈등 조정 관리에……

○임이자 위원 아니, 글썄 그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다섯 가지 분야에……

○**임이자 위원** 국가기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위원님, 마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이 내용이 국가기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기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마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정 현안이나 공직 비위, 인사, 정보 수집 및 관리에도 쓰고 있고요. 국민 고통 위로, 취약계층을 격려하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는 데도 쓰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국회에다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니까?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대국민 격려 이런 부분들도 굳이 가림막 안 해도, 가림 처리 안 해도 국민들이 다 호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료 제출해 주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그분들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지점이……

○**임이자 위원** 당사자 이름까지 써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얼마를 줬는지 아니면 지급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기간이 어디까지고 구간이 어디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그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답변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정을 좀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아까 기획예산처……

○**임이자 위원** 아니, 민주당이 옛날에 야당이었을 때 국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이랬을 때 생각 안 나십니까? 그때 아마 예결위 간사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특활비를 82억이나 삭감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위원님, 저는 안 꺾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민주당은 왜 꺾었습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우리 당의 방침과 지침은 그랬고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당의 방침과 지침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그때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검찰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영수증이 휘발돼서 날아갔더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저도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지금은 저희가 역대 정부로…… 아까 기획예산처장관 말씀대로 공개하고 있고 또 더 디테일한 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개인이 누구고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임이자 위원 자, 그러면…… 시간도 다 돼 갑니다.

뻔한 질문, 뻔한 대답인데 국민들도 보시기에 참 답답합니다.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국민 혈세가 어디 쓰여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집행 생략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비서실장님께서는 그조차도 모른다고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그 내부 지침……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내부 지침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감사원에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할 용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살펴보지 마시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 하신 말씀 못 들었어요, 국회법 128조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개인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을 갖다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지침도 못 줍니까? 지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지침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이자 위원 지침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그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 자체는 말 그대로 지침서기 때문에 본 의원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그것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따 오후 2시까지 그 자료 주실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자료 내용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취지고, 지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침 주고 그다음에 그것 보고 나중에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10초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임이자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특활비의 특성상 기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공개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공개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했던 게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집행 상대방 그다음에 특수활동 수행자, 구체적인 집행 목적 이런 것은 대법원에서 비공개사항으로 판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빼고 지금 이미 청와대는 역대 정부와 달리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저기 보십시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보시고도, 저게 기밀비에 들어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런 부분들 기밀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밀이라는 것이……

○임이자 위원 물론 국정 현안 관련 정보 수집·청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무슨 기금 관련 정책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가림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형식적인, 즉 자문·간담 이런 게 형식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기밀의 유지를 요구하나 안 하나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임이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당사자, 상대방 이름은 안 넣는다 하더라도 감사원에 제출한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러면 열람도 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공개 열람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지침 또 감사원의 결산 그 규정대로 모든 것을 다 임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규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든 결산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사용내역서 안 낸다, 사용 명세, 소명이 모호하다 이렇게 해서 82억 삭감해 놓고 집권하자마자 42억 정도의 규모를 추경에서 반영하고, 내용들도 보게 되면 ‘우리는 공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공개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천팔백몇 건 중에서 980건 이상이 가림 처리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개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2025년도는 청와대가 실제 역할을 못 한 시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못 한,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못 한 공개는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임이자 위원 공개를 한 게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개일 때는 그게 공개 가치가 있지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다만 특활비 차원에서 좀 더 공개를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 공개가 전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시키는 일이라면 그 시간대에 일하는 그 시간, 그 쓰는 전기 비용 그게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개도 공개다워야 공개인 것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공개는 공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역대 정부 못 했던 건데 시도라도, 시늉이라도 낸 데가 있습니까?

○임이자 위원 강훈식 실장님, 이따가 오후에 들어가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에 제출한, 예를 들어서 집행내역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습

니다. 반드시 청와대도 감사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 지침서를 본 의원실로 2시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아직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 인사말씀을, 황명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좀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황명선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또 국방위 예결산위원이라서 10시에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를 안도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결 위원** 총리님께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이지요? 작년 한 해 우리 나라살림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좀 매크로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작년은 양 정부 교체기였지요. 그래서 두 정부가 절반씩 재정운용에 책임을 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해 가지고 재정운용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총리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이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을 했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확장재정으로 운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장을 위해서 돈이 들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건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결 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파행적인 재정운용에서 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세출 쪽을 좀 볼까요? 지난 정부는 경제 여건상 경제 하강기였지요. 코로나 버블이 끝나고 나서 우리 경제가 위축된 시점인데 이럴 때는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야 되는데 경기하고 역행적인 초긴축 재정지출을 한 거지요.

숫자가 저기 다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서 명목성장률에 크게 미달하는 지출증가율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가장 문제가 3년 연속 세수결손이지요. 얼마나 됐지요? 3년 연속해서 97.5조 원입니다.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00조 원 가까운 결손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재정지출 그리고 당면한 민생,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지출증가율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변화가 좀 일어났네요. 하반기 동안 초과세수가 발생했어요, 1.8조가. 그래서 1.8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성적인 세수결손의 늪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탈출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장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상반기·하반기 보면 성장이 상반기에 0.3%였어요, 하반기에 1.6%.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수지요. 내수가 뽐뽐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0.4%였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0.8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 개선이 됐거든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회복했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이 선순환 구조는 금년 들어서 더욱더 본격화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금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현재 한 10% 정도 되고 실질성장률이 한 3%로 5년 만에 3% 달성한 거지요. 그리고 경상성장률 12.3%입니다. 30년 만에 최고예요. 이것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가상승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경제의 체질이, 어떤 수출경쟁력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세수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초과세수 어느 정도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 저희 100조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한 50조 정도.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안도걸 위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도 좋아지고 또 재정도, 곳간도 좋아지고 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지표도 다 개선이 돼요, 지금. 저 숫자로 다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재정운용, 이것 성공적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 정부 시작될 때만 해도 성장률이 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우리의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

니다.

○**안도결 위원** 이렇게 결국에는 성공적인 재정운용을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성공적인 재정정책의 키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재정은 경기 사이클에 순응해야 됩니다. 경기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저성장기 그리고 내수가 좀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진작 기능을 좀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지금은 경제질서의 대전환기입니다. AI 시대, 에너지 대전환 시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미래 대비 투자를 앞서서 해야 되는 거지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방향은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왕도는 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을 삭감해야 됩니까, 세수를 증대시켜야 됩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은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수를 거둔 것들은 기업들의 수출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견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관련해서 성장에 집중하는 여러 투자들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성장에 관련된 부분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결 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왕도는 결국 성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요. 지출 삭감이나 세입 증대 이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경제를 쪼그라뜨리는 거거든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이것은……

○**안도결 위원** 그래서 축소 균형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성장을 통해서 경제 파이도 키우고 또 재정 곳간도 튼튼하게 하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확대 균형에 어떠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안도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홍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안도결 위원** 최근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에 따라 세수 변동성도 굉장히 큼니다.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초과세수가 132조가 생겼어요. 윤석열 정부 때 거꾸로 100조 가까운 세수결손이 생겼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이번 정부 때 현재 초과세수 한 50조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벌써 전망하고 계시지요? 아마 우리 전망치보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현재 초과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된 것은 추정에 반영한 25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고 내년도는 우리 당초 중기재

정계확상의 전망치보다 100조 이상 지금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조만간 예산과 함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질 때 여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적립해서 세수결손기 때 보전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 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7월 15일 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했고 장관님께서 8월 21일 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안도걸 위원** 저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네요. 실상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아주 혁신적인 댐이다, 혁신적인 재정 장치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렇게 슈퍼 예비비처럼 그냥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단순한 기우고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교부방식을 바꿨지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충당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외려 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100조 정도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불용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게 애초 계획상과 달리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불용 처리를 했지요. 또는 세입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위 급변동으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성이 매우 심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금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건 교육재정이건 안정성을 한층 꺾을 수 있을 것이고, 단언컨대 지방교육재정 또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 계속 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결손이, 전년도보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메꾸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여러 가지 충분한 보완장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적정 수준을 보장해 주겠다. 또 과거에 비해서, 추세치에 비해서 부족하면 그것은 별도의 자원 보충 조치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실상에 근거해서 비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오늘 저희가 입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그러한 장치를 촘촘히 만들어 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과세수 부분은 세입세출 외로, 그러니까 추경 편성 없이 처리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이게 약간 국회

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추가세수가 있고 초과세수가 있는데 초과세수는 당해연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추경도 편성 가능합니다. 또 예년과 같이 향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추가세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세수 전망치, 확정치가 아닌 전망치를 가지고 거기를 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전망치하고 실적치가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서 큰 경제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재정운용에 약간 혼선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세수추계를 정확히 했는지 그리고 편입시키는 기금의 규모는 적절한지 또 그 용도는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기금 설치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있고 또 당연히 그중에서 세출예산의 경우는 또 여기 예결위의, 각 상임위의 심사를 저희가 거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촘촘히 국회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그렇게 봐 주시고.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기간이 좀 짧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런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러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40년 만에 행정통합이 됐고 특별시민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린 데 있어서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통 큰 지원이 굉장히 동력으로 작용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이게 교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이 지금 제도설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이게 꼬리표가 달려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번에 통합지원금 교부에 있어서 원칙은 저는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100% 순수 재원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지방이양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양 사업에 대해서도 그 대상은 중앙부처하고 특별시가 반드시 합의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사용처는 이게 뭐 일과성 또 소모성 경비로는 안 되고 여하튼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시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를 해라. 단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 평가는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약속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미래기금과 같이 통합특별시 지원금도 결산보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시다라는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저희가 통합 특별시에 대해서 연간 최대 5조 그리고 4년간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 약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최대 5조 원의 예산을 지금 반영 예정이고 또 조만간에 총리님께서 주재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부 지원안을 확정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다만 자치경찰 등 또 특행기관 등 지방으로 이관되는 그런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안도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부총리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결 위원 정말 국민들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재경위에서 여쭙기로 하겠고요. 저는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제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수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여러 정책목표들 있잖아요. 수급 안정뿐만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그리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여러 정책목표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가 좀 떨어 집니다, 너무나 많은 정책목표 그리고 손질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결국에는 주택시장,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 아니겠습니까? 이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세제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세 형평성 옳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완벽하게 형평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과세 대상, 과표, 세율, 너무 지금 세분화되고 해 가지고 복잡해요.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세무 전문가들도 이것을 좀 해석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납세협력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약간의 조세저항과 불만도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1주택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을 지금 했거든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똥똥한 한 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갭투자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마는 이 구분의 행정적 실익 그리고 납세자에 상당히 고통비용이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세제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월세 공급절벽과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대 전문기업들 있잖아요. 이것 저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임대의 80%를 민간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로는 지금 20%, 공공지원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20%에 불과하거든요. 80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80에서.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를 잠재적 투기업자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세제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공급기능이 조금 마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형 다주택자하고 장기 임대공급자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 즉 대규모, 100채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을 해 가지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임대수입만으로 수지를 맞춰 가는 그런 전문기업들을 좀 양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게 또 수지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이런 쪽에서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세제개편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 공시가액의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12억 같은 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14억으로 하면 시가 기준으로 한 20억까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게 97.7%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가 20억~30억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세금을, 거주용에 대해서는 줄여 줬습니다. 그러면 98.9%, 99% 정도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 줬다, 99%의 국민들은 다.

다만 거주·비거주 말씀하셨는데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했는데요.

다만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 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주신 전월세·매매시장, 전월세시장 가격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데 지금 어쨌거나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매물은 좀 나오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세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전월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든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월세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과 더불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국토부장관님도 와 계시다시피, 하여튼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까, 할 수 있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월세시장 안정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제도가, 물론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통해서도 빨리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건설임대를 촉진한다든지,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장기적인 임대를 하는 사업자들은 육성을 하겠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조배숙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강훈식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강훈식 비서실장은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이석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정무수석님, 최근에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 대법원이 정면 충돌했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호칭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글썽요.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당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삼권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수장이고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월 21일 날 언론보도에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서면 제청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그리고 ‘협의를 건너뛰 유례없는 일방 통

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제청한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조배숙 위원** 관행에 어긋났다,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보시지요.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조배숙 위원**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협의를 갖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없지요?

그리고 지금 서울북부지법의 정 모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가 중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제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기라는 판사인데요. 김민기 판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왜 이 김민기 판사를 고집했을까.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혹시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좀 유리한 재판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뜻 아닌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본인은 동의 안 하셔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글썽요.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확인합시다.

김민기라는 분이 또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4심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었는데 부인이 한 대법원 판결을 배우자

인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한다? 이건 이해충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다른 분을 후보 제청했던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대법관 추천과 관련돼서 추천제도가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 법률 추천제도 자체에서 결함이 있었을 텐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추천해서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러니까 대법원장만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 4명을 추천하느냐. 거기서 어떤 생각하지 못한 문제나 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걸러 낼 후보가 있기 때문에 4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이나 지금 장기간 공석이 됩니다. 지금 노태약 대법관이 그만두고 후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곧 이홍구 대법관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장기간 공석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공석에 두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행, 관행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당과 청와대가 말이지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 깬 사람 누구니까?

그리고 또 쟁점법안이나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례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그리고 또 본회의 단독 상정, 표결을 했습니다. 이 관례 누가 무시했습니까?

또 법사위 간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할 때 그 자율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난번에 법사위 나경원 간사를 추천했는데 투표한 것 제가 정말 그걸 보고 야, 이게…… 투표 기표소까지 설치해서 투표했습니다.

지금 국회법상 다수결 원칙이 우선이지 관례가 무슨 소용이나 이렇게 의회 관례를 아주 휴지조각처럼 무시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는 사전 조율의 관행을 들먹였습니다.

저는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헌법·법률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헌법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처장님…… 제가 뒤돌아서 얘기해야 되나요?

김민석 당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이렇게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 달라’, ‘언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이거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 조희대 씨는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오만의 극치입니다. 정당의 당대표가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요구는 권한이 있는 자가 쓰는 말입니다. 명령조입니다. 또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 사법부 판사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졸로 보는 겁니까? 그리고 또 삼권화합이라고 합니다.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체크 앤 밸런스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입니다.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런 발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관생활을 했지만 법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김민석 씨 언다 대고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분이 하는 일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 서면 제청은 할 일 한 겁니다.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 좀 하세요. 지금 헌법 파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해서 헌법교육시켜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 아까 미래대응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적자성 채무가 1000조를 넘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조배숙 위원 이번에 초과세수가 좀 많이 들어왔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요.

○조배숙 위원 예정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전망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가재정법 90조에 의하면 이 경우에 먼저 채무, 국채 상환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꼭 그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그게 임의규정이라는 건 압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물론 다른 더 좋은 뜻이 있다, 이것 활용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해서 파이를 더 키우자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좋을 때 국채도 좀 상환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발표할 예산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야당 위원님들이나 언론의 지적을 다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했구나라고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저는 국채부터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금 문제에 있어서 ‘미래대응기금을 할 때 국회의 통제를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 통제를 다 받는다. 그런데 물론 편성하면서 국회에 제출하니까 편성할 때는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정작 집행 과정에서 보면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비켜 가면서 전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이 기금 또한 다른 예산안 또 다른 기금과 같이 동일하게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할 수 없지요.

말씀하신 집행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배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답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 통제를 받는다 하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경우는 재정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요, 국회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도 지금 다 30%·20%, 금융성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결위를 오래 해 보셨으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요, 그 틀은 그렇지만 예산처럼 엄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연동제가 지금 폐지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제는 연동 구조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원래는 100조 예정을 했는데 78.9조인가 해서 한 20조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20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용할 예정입니까? 원래 유아교육이나 대학교육에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혹시 미래대응기금 거기에다가 넣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도 오늘 입법예고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당연히 새로운 산식에 의해서 교부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교부금과 그동안에 20.79로 연동된 것의 차액을 기금에 넣어서 저희가 활용합니다.

다만 용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감님들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교육은 OECD 평균 대비 166% 정도 이렇게 1인당 교부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69% 수준입니다. 매우 취약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 이 교육 분야에 균형되게 재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현장과 시·도교육감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조배숙 위원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정책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당사자니까. 물론 총리께서 지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문제인데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임대사업자 문제?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8년 전에 문제인 정부의 임대사업 장려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 당시 문제인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장기임대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임대기간 준수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과태료, 세금 환수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8년 의무임대라는 국가와의 약속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기간이 끝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또 다른 규제가 이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팔아도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해서, 현금 청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을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실상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하면 지위 양도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행법상 10년 보유 5년 거주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뭔가 출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이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들. 그분들 저한테도 문자가 엄청 옵니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들을 잘 보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임대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 말씀 주시고 있는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점검하고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국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면 믿고 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앞두고, 지금 주 52시간제예요. 그 예외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AI시대라 경쟁국들은 막대한 자금 그리고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춘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주 52시간 요청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저기 보면 연 720시간 초과근무 가능이 아니고 연 720……

○**조배숙 위원** 물론 이것은 좀 지나치지요. 지나치지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720시간 내로 해야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중국의 창신메모리 보세요. 거기는 9·9·6 이게 있어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이에요. 이 근무가 기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중국 법으로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불법으로 돼 있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합법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중국은 헌법 위반입니다. 중국은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노동법 위반인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제 얘기는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되겠지요. 하지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지금 우리가 AI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도 유연하게 협의하고 또 서로서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배숙 위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가슴 아픈 사연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조금 전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참담한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

다.

김병찬 기획관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정확한 내용 확인했습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장미란 씨 시신 발견 부분은 제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확인 못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먼저 경찰의 허위 보고와 부실 대응으로 수개월간 고통받은 유족과 가족에게 경찰청을 대표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사과의 말씀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장 씨의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종자 발견과 수색 지원에 활용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련 자료까지 확 삭제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로 본격적인 수색은 수개월 뒤에야 시작됐고 그사이에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핵심 자료 상당수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경찰의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 즉시 수색에 나섰다면 장 씨를 더 일찍 발견했거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사망 경위를 밝힐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과 수색 지연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별도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 사건은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대면확인 원칙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등 기본적 절차가 담당자 한 사람의 허위 입력만으로 무력화된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사람만의 판단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관리자의 이중 확인을 의무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변경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고 관리자의 상급기관에 자동 통보되도록 전산 통제 장치 등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정말 명심하고요. 그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분 다 저희 지역구분들입니다마는 같은 경찰관이 지난달 접수된 60대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허위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분 다 사망한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돌아왔다는 것,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상임위 참석하고 계셔서 차관이 대참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차관님, 제가 4·3 관련 행사에서 몇 번 봤었습니다. 4·3 문제에 관해서 진심인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선배 위원의 속기록을 살펴봤는데 ‘살아생전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심의 지

연으로 눈을 감고 나서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 선배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4·3 피해,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짓밟히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인력 지원이라든지 보상 심의가……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제주 4·3 피해 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희생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국가가 갚아야 될 보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루는 주무부처에서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예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4·3 피해보상금 가운데 1276억 원이 타 사업 재원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재해복구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4년 연속 이·전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해복구 등 예외적 적용이 아니라 관행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만 보더라도 당초 2418억 원 가운데 418억 원이 타 사업 재원에 이용됐습니다. 이용 후에 55억 원이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이 차관님이 얘기하는 예외적 조치를 만성화하는 예산 운용 실태다 이런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할 때마다 국가폭력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상금을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아니다. 재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목적예비비나 재해대책비 계정으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호우, 재난을 말씀 주셨는데 25년도에는 행안부의 인건비 부족분을 85억 원까지 제주 4·3 피해보상금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용한 것에 대해서 재난의 긴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적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또 희생자분들이 신청을 좀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유가족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가가호호 찾아가면서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문대림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못 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문대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93억 원이 발생했는데 국가가 이제 이자까지 물면서 원금을 다른 데 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입

니다. 이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93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93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 원인을 분석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년부터 원래 대상자한테 당초 계획은 5년에 나눠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3년·4년 차는 늦게 한 만큼 정부에서 고시한 적정 이율을 지급하게 된 거지 지금 말씀한……

○**문대림 위원** 이렇게 93억 원 정도나 됩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사망자 1인은 9000이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이자 지급도 시중금리에 따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기획처, 하여튼 정부에서 고시한 적정 이율을 주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급 대상은 늘고 있고 지급 완료 시점은 늦어지고 있는, 그래서 4:3 피해보상금이 4년 연속 타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25년도까지는 절대적 결원인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충원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작년 25년 11월에 다 민간위원들 충원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밀려 있다면 회의 주기가 지금 월 1회라고 제가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굳이 월 1회를 할…… 월 2회로 상향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신청 수요에 따라서 적의 적절하게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차관 대참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4:3 국가책임 예산의 문제는 행안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게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후속조치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국가배상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지요? 이게 2022년 218억에서 2025년 1084억,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형사보상금 예산은 420억에 불과합니다. 이게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소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재심사건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건들이 급증한 상태이고요. 또한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지연이자 배상 등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편성을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22년에 비해서 25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은 과소평가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결국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청·교도소 인건비뿐만 아니

라 마약수사, 형사부 수사 지원 등 타 예산에서 425억 원을 이·전용하고 예비비 249억 원을 보상금으로 충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직권재심 관련 보상금인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권재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전에 집권당 시절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직권재심도 추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된다, 이게 돌발 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재심 무죄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건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이와 같은 과소편성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420억 원은 지나칠 정도로, 직권재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지적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총리님, 들으셨듯이 행안부는 남은 피해보상금을 타 사업으로 돌리고 있고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타 사업에서 끌어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청주의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해당자가 계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피해보상금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사과이고 헌법이 명령한 국가배상, 즉 헌법적 국가배상 성격을 갖는 과거사 보상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3 관련 개정안들은 연이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유족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 4·3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그날까지 제주 4·3에 대한 아픔, 눈물을 멈추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반갑습니다.

○**문대림 위원** 최근 증권 거래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전망보다 약 10조 원 증가한 재원을 어디다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특세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인 만큼 우리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박홍근 장관님, 혹시 농특세에 대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특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포함시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그 후에 기재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게 진실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론보도 사항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로서는 이런 급증한 증권거래세로 인해서 10조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지역의 발전이나 또는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예산을 통해서 또 같이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미래대응기금에 포함시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에 지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얘기는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관련된 목적에 합당하게끔 제가 쓰게 할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지역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주관 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각 부처랑 협의하면서 관련된 기금과 계정, 특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협의해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마 협의 과정에 송미령 장관님, 농어촌 기본소득에만…… 지금까지 발표된 문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농업 전문가 집단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 농지 매입, 밭 기반 정비를 비롯한 농업과학기술의 확대 그리고 농촌지역의 AI 확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AI 전환 대단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진행 과정을 보면서 가장 AX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1차 산업, 농촌·농업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이 부분의 전폭적인 투자를 유인해 내는 게 저는 장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농특세가 우리 농업·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목적세에 맞게 쓰이도록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반을 안정화하는 것과 미래대응을 위해서…… 그런데 706억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올해 대단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는 봤는데 어쨌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중에 50% 정도 예산이 불용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속도를 좀 더 내겠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이번 농업소득이 1000만 원대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넘어선 가장 큰 요인이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작년도의 농산물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문대림 위원 축산 분야 아닐까, 분야별로 따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축산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분야에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농림부가 지나칠 정도로 손을 놓고 있다…… 그 지적은 나중에 상임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문대림 위원 어쨌든 재정운용전략협의회입니까? 같이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윤호중 장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행안부차관 대신 참석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5극 3특 균형성장이 핵심 국정과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문대림 위원 그런데 전체 집행률이 작년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6조 4080억 가운데 15조 836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96.3% 인데요. 그런데 공개된 결산 자료에 의하면 5극 3특에 각각 얼마씩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성과가 났는지, 특히 3특 재정 기반이 어떻게 실제로 확충되는 데 기여했는지 이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3특 지역에서 소외론이 나오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5극 3특 관련해서 3특 지원을 위한 것은 제가 알기로 초광역특별계정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계정 사업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고요. 제주·세종 계정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세종 기존 계정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3특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의 내용, 사업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지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초광역 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고, 이게 기준이 됩니까? 지금 신청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특은 총사업 총 8건에 602억, 15.9%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대상 사업과 이런 부분……

○문대림 위원 그리고 어쨌든 광역인 경우에 다수의 시도 간 연계성, 대규모 사업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3특인 경우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게 3특도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재정당국에서 국정과제 취지에 맞게끔 좋은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특별법에는 초광역권의 3특하고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5극 3특이 모두 포함되도록 지특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 의원실에 협의해서 지금 추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광역계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저희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넣고, 지금 각 지방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향후 법 개정도 저희가 감안하여 지방, 제주나 세종 등 포함시켜서…… 3특이지요, 세종이 아니라, 3특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과 별개로 균특회계 안에 지금 세종계정하고 제주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하여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총리님과 김윤덕 국토부장관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예결위 전문위원께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첫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감독체계를 점검할 것. 두 번째,

지침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할 것. 셋째,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까지 재정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제대로 지킬 것.

결국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본연의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박용갑 위원 저는 오늘 이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첫 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세 번째 지금 지방에 가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 지난 8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날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389개 청년정책과제에 약 30조를 투입했지만 청년 체감도가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2025년 청년 일자리사업에 1조 2000억 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청년고용률은 2024년보다 오히려 1.9%가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는 제대로 된, 청년들에게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구상을 발표했고 2005년에는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53개, 약 5만 1700명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에는 우선고용에서 의무채용으로 바뀌었지요. 이에 따라서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됐고 채용 비율을 2018년도에는 약 18%에서 채용 비율을 점점 높여서 2022년에는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30조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인재가 의무채용 비율에 미달하면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채용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바로 제4항을 만들어서 예외 조항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쪼개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기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공사는 1년이 아닌 수시로 5명 미만 채용을 계속해요.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공사는 직군과…… 어떤 때는 직군을 묶고 어떤 때는 직렬을 쪼개 가지고 5명 미만을 채용합니다.

또 언론보도에 보면 어느 결재원은 보니까 37.5%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4%밖에 채용하지 않았어요. 또 어느 공사는 32% 채용했다 그리고 28% 채용했고, 어느 공사는 30.8%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25.5% 했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있지요? 그리고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아니면 부담금만 내고 그냥 끝내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예외 규정을 뒤서

피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민간기업 앞에 청년일자리를 만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기관이 먼저 출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님, 2019년까지 1차로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또 지역인재 채용과 예외 적용한 실태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지역인재랑 채용 실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조사하고요.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실제로 예외 규정으로 필요한 건지도 점검하고, 말씀하신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서울에 본부가 있다든지, 어느 본부, 또는 사업소가 있다든지 여기서 채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 30%를 지키지 않고 여기서…… 물론 여기서 채용하면 5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고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내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우리 지역에 어느 공공기관이 내려온다’,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채용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실망을 할까…… 물론 저도 혁신도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못 하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기획예산처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전통시장 나가 보면 진짜 장사 안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물 좀 갖다 드리시지요. 전문위원님들, 물 좀 갖다 드려요. 계속 보고만 있지 말고요.

○박용갑 **위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메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방의원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어느 공사를 하는데 물품을 전부 다 본사에서 사서 내려보내요. 지역의 대리점이나 판매업은 그냥 굶어 죽습니다, 똑같은 물품인데. 가능한 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 똑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이용해 줘야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 돈이 지역에서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박용갑 **위원** 이런 것이 있고, 혁신도시가……

장관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몇 기관? 350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체 그 정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여튼 가능한 지역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용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법 개정 대표발의를 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 상품, 지역 물품을 의무적으로 팔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미분양주택, 지금 지역에 가 보면 미분양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2만 5000세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내려가면 직원들에 대한 후생,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든 아니면 기숙사를 해 주든 이런 것은 LH가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든 또는 기숙사를 제공하든, 그러면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주거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역인재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말씀 주셨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역의 사택과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지역에 내려갔을 때 직원들의 정주여건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앞으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보통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장관님? 8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11월 정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지역의 기능에 맞게끔 이전을 시키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비단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3청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혁신도시 지정도 안 됐었고요. 이제 겨우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많이 좀 소외되는, 대전시민들이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우리 대전의 기능에 맞게끔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전에 1차 때 했던 기관들이 가진 지방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쪼개기 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편법들에 대해서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매와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 이전에 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또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가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씩 하나씩,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공청회, 청문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그런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김민재 차관님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박용갑 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전 중수청이 임시로 세종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부산 중수청은 부산에, 대구 중수청은 대구에, 광주 중수청은 광주에, 수원 중수청은 수원에, 그런데 대전 중수청은 왜 세종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대전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저도 우리 대전의 일곱 분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준비 못 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임시……

구 대전세무서 부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부총리겸경제부장관님, 행안부에서 사용 승인을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차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해도 일단 설계비라도 세워서 신속하게 대전 중수청이 대전으로 다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부득이하게, 10월 2일이 개청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기간이 좀 촉박해서 임시방편으로 세종의 빈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로 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경부가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대전세무서 자리에 잘 신축을 해서 대전 중수청이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대전시에서 일단 7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전 중수청 설계하는, 용역하는 그 비용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행안부, 관계부처랑 제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전 중수청이 세종에 가서……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자기 지역에 가서 중수청을 개청을 하는데 진짜 대전시민들한테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난방용역 부가가치세를 이번에 일몰 폐지를 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폐지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2026년 말에 종료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동안에 부가가치세…… 이게 난방용역은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거기는 임대아파트가 세 종류잖아요. 지역난방과 개별난방과 난방용역 이렇게 세 종류인데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사실 그런 혜택을 그동안에 못 받았어요. 지역난방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이 난방비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됩니다, 겨울은 돌아오고. 이런 것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재경부랑 협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세지출, 세금을 감면한 이것은 부가세 면제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재정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안에다가 영구임대주택 연료요금 지원 이렇게 적극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영구임대주택이 사실 지금 지역난방과 중앙난방, 개별난방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흥근 예, 염려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저도 제 지역에서 있으면서 사실 대전 지역이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들 또는 총리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조원철 예, 여기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법제처장님 말고, 죄송합니다.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제청, 동의, 임명 그 세 절차에서 제청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권리 침해보다는 관행 침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권리 침해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가 되겠습니까? 제청권 침해보다는 관행 침해…… 그러니까 대법원장님은 제청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국 관행 침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관행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행 침해는 권리 침해가 됩니까? 아니지요? 관행이 어떻게 권리 침해가 되겠습니까? 관행은 관행일 뿐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상 인정된 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 법사위 위원장 내놓으라는 데 안 주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너무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마 입장상 말씀하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청권은 원래 서면으로 하는 것 맞지요? 제청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합니다.

○김태규 위원 맞지요? 그래서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단지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당일, 만나는 당일은 조율이 안 이루어지지요. 그때는 인사만 하러 가지지요, 거의 그냥. 그리고 조율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루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이 그리 되어 왔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갔냐, 안 갔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가기 전에 조율이 돼야…… 만약 조율이 있었다면,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이 지켜졌다면 그 조율은 아마 그날 이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지 인사만 하러 갔을 뿐이었을 겁니다, 관행을 지킨다 해도.

그런데 그 이전에 서로 조율이 안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관행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 관행이 무너졌다는 걸 이유로 마치 큰 권리 침해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래서 제청하고 동의하고 임명하는 절차인데, 대법원장은 제청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청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서면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절차는 동의 절차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 임명권 행사할 때 오지요. 그래서 동의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고 하더라도, 물론 동의 절차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서 이미 그 후보에 대한 임명은 종료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그걸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시간이 왔을 때 대통령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해서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이렇게 각 부가 최종적인 대법관 임명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의 시간에 대통령이 들어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들어왔다고 난리 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동안 관행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또 이 말씀 한번 드려 볼까요.

고등법원 부장 제도 폐지됐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연간 고등법원 부장이 보통 몇 명쯤 임명이 됐었습니까, 승진이 이루어지는 게? 이전에 23기 있을 때, 이전에.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열다섯 분……

○김태규 위원 15명 정도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되고 나니까 법관들이 이제는…… 15명 안에 들기가 원래 힘들었습니다, 고등부장이 되기가. 왜냐하면 차관급으로 예우받는 자리니까 굉장히 힘들고 경쟁이 치열했었지요. 그런데 그걸 폐지하고 나니까 이제는 승진이라는 제도가 오로지 대법관에게만 남아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부장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결국 대법관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승진이고 나머지는 다 연공서열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김태규 위원 그거는 제가 누구를 어떻게 인사했느냐 이걸 여쭙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 안의 종전의 인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처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신 것인데 그냥 저는 확인만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법관들은 이리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법관이 14명이지요. 대법관은 정말 되기가 힘듭니다. 14명이면 연간 6년 임기로 잡아도 한 2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점 몇 명밖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2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전에 고등부장 제도를 통해서 승진하고자 했으나 고등부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승진이나 이러한 것들은 연공서열로 어차피 가게 돼 있으니 특별히 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승진을 위한 동기가 별로 없어지다가 대법관 숫자가 26명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물론 고등부장 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잘하면 대법관도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건 맞지 않습니까? 두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되면 법관들이 드디어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결국 입법·사법·행정 3개의 절차를, 제청·동의·임명의 절차를 거치는데 셋 중에서 결정적으로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십니까? 계산상·논리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청권이요, 제청권을 무력화시켜 버리면 됩니다. 제청권을 무력화시켜 버리면 더 이상 대법원장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어지지요. 그러면 국회 다수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청권을 애초에 무력화시켜 버리면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한 논리의 흐름상 나타나는 결론만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인데 그 확인조차도 안 해 주시면 제가 좀 서운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결국 대법원 대법관 임명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다. 제청권을 무력화시켜서 임명권 하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확인 다시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 좋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관회의에서 뭐 하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려오게 법관들이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도에서 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 주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회

가 있지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가 돼서 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졌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법원 안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인데 아마 여기서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실은 법원 안의 정치적 결사체로 돼 있지요? 법원 안의 하나회라는 평이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그러한 평가가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그것도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대단한 얘기를 확인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게 대부분 법관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확인이 역시 어려우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그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추천할 때 꼭 1명 들어가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맞습니다. 선임대법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원 안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라고 해서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이걸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관, 대개는 보면 선임대법관이나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안에서의 지위도 있으시고 또 입장이 있으셔서 토론 과정에서 크게 별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면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된 그 사람은 굉장히 맹렬하게 그 토론을 주도하고 해 나가지요. 그렇게 제가 이미지화를 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대법관 추천위에서도 들어가셨던 위원 한 분이 실제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주십니다, 실제 그렇게 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거는…… 법원 내부를 잘 모릅니다. 지금 행정처장님하고 저하고 나누고 있는 이 얘기, 23기부터 고등부장이 없어졌다라든가 등등의 얘기들, 이 법원 안에 있는 얘기들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 모르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 법관은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 법관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쳐진, 그렇게 해서 추천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천된 2명조차도 못마땅해서 1명을 빼겠다는 겁니다. 맞지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하고,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추천된 두 후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비를 했었지요. 고향이 부산, 전남. 한쪽은 지역법관 한쪽은 경향교류, 한쪽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법원장을 했고 한쪽은 고등부장을 했습니

다.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한쪽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맞습니다. 한쪽은 아니 십니다.

그러면 2명의 대법관을 이렇게 놔둘 때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현장에 있던 위원 들이나 일부 위원들이 좀 배려를 한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중의 1명조차도 못 받아들인 거고 하필이면 거기는 지역적으로 부산 그리고 지역법관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사 람이 배제돼야 된대라고 청와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맞겠습니까?

그때도 행정처장님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인사를 할 때 다수 간의 균형도 고려한 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셨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대법원장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나름 안배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조차도 특정 지역, 특정 학회가 아닌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선례로 만들어 내서 최종적으로는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 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런 얘기도 있지요,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도에서 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셨지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맞지 요? 법원행정위원회를 만드느니 법관들을 행정 일선에서 빼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지요? 그래서 법원이 말을 안 들으면 항상 들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듣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법원을 무력화시키고 법관들을 사법행정에서 완전 빼 버리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라 고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입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꼭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해 주시고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차관님, 제가 이 역시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지요.

미래준중위원회 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에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설치 근거가 훈령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 훈령이 근거입니다.

○**김태규 위원** 훈령이고 특별히 어떤 국민적·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뽑힌 사람들도 아니지요?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장관께서 임명하신 위원들이십니다.

○**김태규 위원** 임의로 뽑으신 거지요? 거기서 지금 한 19건 정도 선정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진상조사 사건으로 19건을 선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쪽 제가 한번 볼게요.

1차 선정 때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 김용 이런 사건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1차 선정 대상 사건이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추가 선정되면서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위증교사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국민들로부터 대상 사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기간을 거쳤고 그 신청된 사건 중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와 같은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고 해서 그 권고가 권한이,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왜 합니까?

보십시오. 많은 오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9개 중의 8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훈령으로, 법률도 아닙니다, 헌법은 당연히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행정규칙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규정을 가지는 행정규칙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지 훈령입니다. 훈령으로 이런 걸 만듭니다.

기관의 존립 근거가 굉장히 약하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장관……

○**김태규 위원** 그리고 권한도 역시,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따라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런데도 하거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버리면 밖에서 보기에 명분 만들어 주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무슨 위원회를 만들지요. 예전에도 보면 방송계 쪽은 진미위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위원회, 온갖 위원회를 각 부처에 만들고 심지어 공공기관에 만들고 방송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요?

저는 이것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명분 만들기, 그래 가지고 언론·여론용으로 써먹기. 이렇게 해서 만약 법원의 판단하고 달라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진상조사…… 미래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고 검찰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었고……

○**김태규 위원** 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법무부차관 이진수** 여기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면 법률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훈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독 안전들을 보니까 전부 다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요? 그리고 실상은 그것을 추천하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이해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쪽에 편향되고 표적 내지는 과잉 수사라고 하는 비판들이 집중되었던 분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로부터 조사 대상 사건도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 그중에서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사건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규 위원** 그렇게 검찰이 검찰 스스로의 권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행위를 자꾸 하시니까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우리 법체계에서 지워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정도 할게요.

○**위원장 이광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준 위원** 인천 계양을 출신 국회의원 김남준입니다.

오늘 예결 결산이라는 걸 처음 해 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하시는 모습들 잘 지켜보면서 열심히 배워서 제 역할 다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결산심사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대정부질문과는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건 국가재정의 기능이 어떻게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기능은 제가 배운 걸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 효율성 있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 얼마나 형평성을 잘 갖춰서 분배가 되고 있느냐. 또 하나는 경기조절의 기능, 즉 경제 안정과 성장 측면에서 국가재정이 잘 기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먼저 간단하게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국가재정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계획과 차이점을 혹시 느끼시는 것은 있는지 간단히 여쭙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위원님 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자원배분·소득분배·경기조절 측면에서 본다면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성장

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리고 소비 진작 관련된, 이 경기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패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의 확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성과를 통해서 이것이 아래까지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많은 조치들이 좀 더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준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민생 안정의 공과 과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이 안정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 자명한 일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재정과 성장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전후로 오히려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예산 총지출이 10.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성장률은 0.8%로 추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시기에도 또 극단적인 패튼을 보였고요. 물론 경제의 다양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내거나 아니면 그냥 단년도 한 번에 전적인 회복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이 안정된 성장 유지에 선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후행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이런 것도 불충분했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봅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 들어서 재정과 성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우리는 모범적으로 극복을 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 3년간 성장은 저하됐고 2년간 83조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재정과 경제를 병들게 했었다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재정 악화에 따라서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니 2025년 예산 총지출은 2.5% 늘어선 직전 10년 이상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25년 세계의 성장률이 3.3%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1% 성장에 그쳤습니다. 미국 2.2% 또 호주 2%에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가늠이 됩니다.

2024년 2분기부터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970년대 이후 단 네 차례밖에 없었던 1% 미만 성장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마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나마 내수 소비 증대로 지탱한 것이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중순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정치적인 안정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총지출 8.1%를 늘리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추구하는 재정정책을 표방했었고

요. 단기간에 투자와 금융 활성화 유도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까지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총리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2026년 예산편성을 하셨을 당시에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으로 삼아서 편성을 했던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상반기 성장세 당시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경제 대전환기에 AI 대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해서 거의 3조 원대를 10조 원대로 이렇게 재정을 늘렸었고요. 그다음에 경기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정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정만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27조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면서 성장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 제가 그때 공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재정을 늘려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금년에 나타나는 게, 아마 이런 선순환 구조가 향후에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진짜 잘했다. 전환기에는 돈을 아끼려고 하면 축소경제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는 GDP가 줄어들고, 적자가 더 커지고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준 위원**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30위권 주요국들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자료가 확인이 되는 22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16위 수준이었는데 2026년 1분기에만 1.8%라는 성장을 실적으로 22개 나라 중에서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2분기까지 포함하면 성장세가 3.8%에 이릅니다. 이에 맞춰서 IMF와 OECD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승 수정했지요. 최저 1.8% 수준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2.6%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들을 모두 그냥 수출효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장의 지출 기여도를 보면 올해 1분기 1.8% 성장률을 구성하는 수출 기여도는 2.7%로 가장 높아졌는데 민간 지출 또한 1.9%로 그 못지않게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반기 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외변수나 대외리스크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재정과 성장 간의 동조화, 즉 양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발판이 조성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회복세를 되살렸는데 이것을 확대하면서 유지시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총리님은 이와 관련해서 재정계획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살린 성장의 불씨를 더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초혁신경제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가려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고 또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그다음에 산업의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해야지만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아마 저희들은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김남준 위원 이제 2027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편성 초기 단계부터 오롯이 설계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 예산이 될 것입니다. 800조 원 알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슈퍼예산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성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충실히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 준비를 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부총리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니까요 2025년에 추정으로 지급된 13조 500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성장률을 0.12%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1.1%로 낮았지 않습니까? 소비쿠폰 효과가 얼마나 의미 있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봤을 때는, 13조 5000억이 지급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를 55.8%까지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정책 만족도도 70.3%고.

이제 시중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쨌거나 이분들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도의 경제성장뿐만이 아니고 골목상권의 선순환 구조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특히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봤는데요 5.86조 원 소상공인 순매출이 증대가 됐고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2023년 이후 최고치 또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또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2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런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국 통계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2025년 1.1% 성장률을 구성하는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는 0.7 그리고 정부소비는 0.5, 그러니까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확인되는 1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성장률은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런데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8위 수준으로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투자 저하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가 수출과 함께 성장률을 지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설계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당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남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지원방식에는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3월에 편성한 중동 위기 대응 추정 같은 경우에도 AI 특수나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세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추진을 했으면

규모 면으로는 조금 더 충실하게 편성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추경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속도전도 중요합니다.

○김남준 위원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규모로 빠르게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도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한은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 지원방식, 사용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소비 지원을 잦은 추경으로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예산으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농축수산물 전통시장 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동행축제 행사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그 예일 텐데요.

이번에는 기획예산처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올해 규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규모와 내년 지출증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마다 저희가 증액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할인을 확대를 포함해서 규모를 키워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또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보강할 예정에 있고요, 지원율을.

그리고 요즘 배달 관련해서 상생 배달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숙박에 대한 쿠폰이라든가 또는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 농식품 바우처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준 위원 올해 세제개편에 근로장려세제 소득 여건 완화한다 또 지급액도 확대한다 이런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지원 규모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ITC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동안 물가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 단독가구 그다음에 홑벌이 또 맞벌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단독가구 같으면 22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지급 대상이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4조 7000억에서 5조 9000억으로 1조 2000억이 확대되는 등 EITC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저소득 가계의 소득 보전을 함께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 세제 지원에서 재정 지원으로 좀 바꾸는, 전환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소비 효과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이번에 세제로 지원하던 것을 재정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한 17개 정도로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세제를 감

액해 주다 보면 저소득 가계에는 자기가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게 없는데 감액되는 게 없
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재정 지원으로 돌려 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적게 나타나고.

세제라는 것은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감면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차도
길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저소득 가계라든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데는 이번에 예산처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정지출로 17개 사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남준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구매력이 강화되고, 구매력이 강화된 것을 통해서 경
제의 선순환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유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17개 사업, 1.4조를 저희가 감액을 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 내년 예산은 재정으로는 1.4조에 그치지 않고 1.9조로 저희가 확대 반영할 예정입니
다.

○**김남준 위원** 재정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인구구조라든지 거시경제 환경의 복잡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승수 산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밖에서 발생하는 이런 외생적인 경제 충
격도 더욱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생에 빠르고 정밀한 재정효과 분석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 그리고 국책기관과 협의해서 장단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승수 모델을, 승수 모형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혹시 이와 관련된 계획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 가계일수록 한계소비성
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득이 생기면 다 생계비로 지출하고, 저축을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저희들이 재정지출을 이분들한테 덜
리버리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면 승수효과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전달체계 그리고 이
분들 외에도 이분들이 어떻게 자생력을 가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득을 좀 이
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재
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경제성장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소비 지원 예산도 단순히 지급 금액의 규모보다는 지급 단위당 얼마만큼 내수 소비를
이끌어 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유발계수 개념을 예산사업의
중요한 성과지표로 작용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처장관님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 못 했다면 추후 검토 결과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이런 노력들이 모여야 K자 양극화 현상도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
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바닥 민심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들
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봅니다.

짧게, 8·13 대책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8·13 대책 핵심은 2030년까지 150만 호 신속히 공급해서 주거안정 실현하겠다 이런 목적일 거고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1일에 국가유산위원회가 태릉 공공지구 조성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가결을 했고 또 18일 국무회의에서는 태릉CC 포함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시키는 내용의 안전도 통과가 됐습니다.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 착공 물량은 전년도랑 비슷한데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착공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그게 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 자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양은 착공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분양받는 집이 과연 언제 분양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패닉 바잉 심리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께 한번 여쭙봅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토론회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이 예측가능한 공급의 계획을 달라 말씀 하였고 이번에 저희가 정리하면서 공급이라는 용어도 좀 더 명확하게, 착공인지 인허가 단계인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드리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리실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전담조직도 만들고 국토부나 그리고 재경부나 이런 관계부처들 장관회의도 적극적으로 해서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공급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해 드리고 일정을 빠르게 갈 수 있는 신속 공급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준 위원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의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이종욱 위원 25년도 결산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비비입니다. 원래 정

부 예산 요구가 4.8조였고요.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2.4조 원, 50%를 삭감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그때 같이 기재위에 있었고 예비비 반토막 내시는 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큰 공은 아니었고요. 팩트는 회의록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종욱 위원 질문 안 했습니다. 저도 회의록 봤습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필요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그 안을 받았으면 그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이종욱 위원 기다리세요.

그 당시 민주당의 삭감 논리는 실집행액이 1.5조 넘은 적이 없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고채무부담행위 1.5조 있다, 그리고 각 부처 재해대책비 1조 원 활용하면 된다 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집권하고 5월 1일, 집권하기 전이지요. 5월 1일 날 1.4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사이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어요. 실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수정권이 1조 원대 집행할 때 민주당에서는 3조 1600억 썼습니다. 예산은 반토막 내고 본인들은 2배 넘게 지출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지요. 오전에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입니다. 전액 삭감했고 이것도 2차 추경 때 전액 복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6개월분 같지만 6개월 남았기 때문에 100% 복원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한 푼도 없이 지냈고 본인들은 100% 썼습니다. 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내용이 날짜, 금액, 집행 제목 그 정도입니다. 오전에 보셨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깜빡이 공개입니다.

이 정도 공개 안 했다고 특활비 100% 삭감한 겁니까? 이 정도 공개하면 괜찮은 거였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윤석열 정부 때, 저때라도 했었을 겁니다.

○이종욱 위원 질문 안 했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장관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무리 여야가 정치적으로 싸우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가 기능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생각을 합니다. 밭지요, 밭다고 골탕 먹이겠다고 정부가 기본 기능조차 못 하도록…… 국정 발목 잡기도 아니지요, 이것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것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예산폭력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다고요?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 돼 가지고 예비비 반토막 내고 특활비 전액 삭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해도 됩니까?

○이종욱 위원 시간이…… 한 20초, 30초 정도만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뿐입니다. 다만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특별비, 특별비는 기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공개한 게 없다니까요.

다음,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종욱 위원 총리님,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127조 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7조면 그동안 해방 이후 쌓아 왔던 국가채무의 10분의 1을 1년에 쓴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계속 100조씩, 150조씩 국가채무 쌓아 가지고 버텨 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국가재정 관리원칙이 뭐니까, 한마디로?

○국무총리 한성숙 성장에 집중해서 저희가 진행해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종욱 위원 예,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저는 한마디로 닥치고 지출, 무책임한 확장재정이라고 평가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위원님 설명,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종욱 위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소리는 무식한 소리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쓰냐. 긴축재정이 그 자체가 포폴리즘이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사람 보고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지요.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중기재정계획 띄워 주시지요.

지금 2025~2029까지 국가채무가 487조 원 늑니다. 이것을 처음에 집권하고 바로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권보다 아마 국가채무를 많이 늘리고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관리재정수지 -3%, 계획기간 내내 늑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은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면 된다’, ‘이번 정권하에서는 원 없이 쓰고 다음 정권이나 균형을 맞춰 보시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기전망 볼게요. 이것도 집권하자마자 바로 발표한 겁니다. 1차 있고 2차가 문재인 정권 때 발표했고요. 3차가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2차 전망에서 어떻게 했지요? 보시는 것처럼 2060년에 81%고요.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2065년에 작게는 156조, 많게는 173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누가 더 책임 있는 정부로 보이십니까?

저는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염치는 있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축소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기는 했지요. 그렇지만 제가 높이 치는 것은 ‘국민들한테 국가채무를 세 자리 숫자, GDP 100%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 드리겠다. 우리가 뭐라도 노력을 하면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뭐 통계 축소 조작인지 어떤 정책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1이라는 숫자를 국민들한테 내놓은 거고, 이 정부는 ‘감사원 감사도 받기 싫고 일단 발표는 해야 되니 내가 계산을 해 봤더니 156%—156조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156~173% 나온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의욕이나 이런 것은 물어보지 마라. 일단 계산은 그렇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채무 감축 의지나 이런 것을 보여줄 생각이 없는 정부다.

재정준칙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건 지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준칙 없는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월드뱅크 자료에 보니까 백이십몇 개국 조사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한 개인가 더 있던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미래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현 정부는 원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 부담은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넘기면 되고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돈 쓰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래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끼고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온 나라가,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처럼 내년에 10%·15%·20% 증가를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제가요 시간이 이것 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보는 국민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미래대응기금은 한마디로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기금이다, 재정 꿈수다 정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정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재정제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총리님, 초과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올해는 50조라고 아까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올해 50조, 내년에 한 100조 정도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부가 왜 고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초과세수라고 세입에, 이마빡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들어오면 세입 처리하고 지출은 들어온 만큼, 봐서 필요하면 더 많이 지출하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초과세수라는 것을 처리 방안을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국제 상황에 우선하라고 원칙이 있습니다. 외국 국제기

구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무 상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에서도 127조 국가채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가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초과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고민을 합니까?

대통령이 초과세수로 국가채무 상환하는 걸 바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국가채무 갚는 게 바보 같은 것이라고 같이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 빚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확장재정은 무조건 저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이 갚을 수 있는 능력하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해외 기관들도 지금 한국의 확장재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답변시간을 많이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원고자.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쓰기보다 이것까지 다 쓰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PPT 화면 보시지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1788조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 GDP 58%까지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50조, 100조가 날아온 겁니다. 저만큼 국가채무를 갚아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더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뭐냐, 초과세수,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왜? 이걸 떼어 내야지 안 떼어 내고 섞으면 같이 일반세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재정수지 개선되고 국채발행 축소로 자동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떼어 내야지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저는 그런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PPT 띄워 주세요.

교부세·교부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추가세수가 없다고 중앙정부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크게 보면 20%는 교육청에 나머지 20%는 지자체에 줘야 됩니다. 주기 싫은 거지요. 교육청이, 지자체가 반도체 호황하는 데 뭐 기여한 게 있냐, 중앙에서 더 중요한 일, 미래 대비 투자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부는 뭐 기여한 게 있습니까? 기여한 게 없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금의 연동제를 없앴지요. 별도 산식 만들었습니다. 교부세도 모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돈을 빼고 19.24%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세수 늘어나는 부분을 오로지 100% 다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교육청도 지금 불만이 많지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세수가 줄면 지자체는 뭐 세수를 채워 줘니까? 줄 때는 같이 줄이고 늘릴 때는 왜 혼자서 먹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지자체의 그런 불만사항도 정부에서 잘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적합하냐는 겁니다. 세입이 일시적인 세입이잖아요. 지금 누가 압니까? 내년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느 국제기구나 어느 증권사나 평가기관도 잘 모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우리 정부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출 보시지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거의 우리 세출의 대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갖다 붙이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일반회계 쓰고 어떤 거는 여기다가 미래대응기금이 합니까? 구분 기준이 뭘니까? 중복이지 않습니까.

더 큰 거는 왜 기금을 택했냐? 저는 기금의 주요항목 20% 조정하는 자율재량권을 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에. 100조면 20%면 얼마입니까? 20조예요, 20조. 예비비라 해 봤자 겨우 1조, 2조 하는데 이것은 20조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냥 통으로 국회에서 도장을 찍어 주시면, 아까 박홍근 위원님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말은 그런데요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이 아니고 국회 예산심의와 재정 통제를 크게 약화시키는 거다. 만약에 우리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국가재정법 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서의 주요항목 지출 20%, 미래기금은 적용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천명하십시오.

그다음, 재정담의 문제인데요. 재정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재정공간을 왜 따로 둥니까? 지금 우리가 균형재정 하고 있나요? 채무가 1400조, 관리재정수지가 -107조입니다. 올해 이자만 33조 6000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초과세수가 들어왔는데 빚을 안 갚고 탄살림 차린다고요? 그것도 반 정도는 쓰고 남은 거는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자신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예, 최대한 할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뭐 100조 합니까? 한 1000조 정도 빌려서 돈놀이 해 가지고 국가 운영하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제가 보니까 미래대응기금은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배우자 몰래 생긴 비자금 관리하는 것 같아요. 국가재정을 배우자 몰래 생긴 비자금 관리하듯이 할 수는 없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최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세수 개념 필요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만들겠다, 결국은 기존의 장기계획·중기계획에서 쓰기로 한 것 다 쓰고 빚 내기로 했던 것 다 빚 내고 추가로 들어온 세입도 다 쓰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기존의 재정 운용 체계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재정적자 축소라든지 국가채무 상환 이런 것 하지 말고 정권이 원하는 사업에 더 많이 더 탄력적으로 국가 예산을 무슨 정권 자판기처럼 운영하겠다는 재정 꿈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1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빨리 읽은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1분씩이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한번 돌이켜 보면 그때 재정지출 증가율을 거의 역대 최저로 관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또 경기 악화 때도 재정 대응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3년에 걸쳐서 100조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그 결손 발생으로 결국 성장률이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0%대까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3년에 걸쳐서 다 불용 처리하거나 또는 세입경정을 하면서 지방행정, 지방교육재정 모두가 다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방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됐던 것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나 또 국민의힘이 입장 낸 것 잘 봤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재경위 또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 우리는 지금 지출 구조조정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통해 가지고 저는 재정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 한꺼번에 다 쓴다, 빚 그냥 생각 않고 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세수가 늘었을 때 국채 상황에 다 쓰면 줄었을 때 다시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다시 발행했을 때의 이자는 더 높게 됩니다. 오히려 더 부담들이 큰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필요할 때는 국채 상황 당연히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공개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장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저는…… 여나 야나 같은 방향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을 제대로 설계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리고 재정준칙 말씀하셨는데, 재정준칙도 제가 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 참 많이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만든 나라들마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 경직된 준칙이 탄력적 운용을 막는, 경직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다 완화시키고 있거나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저희는 충분히, 지금은 국제기구마저도,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이제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의 국가채무 상황은 아주 개선될 것이다, 그 결과를 조만간에 보시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저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전환에서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맞이한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이걸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 시대에 산업의 변화를 한번 봤던 경험으로 본다면 지금은 정말 놓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다 가슴 떨리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걸 그냥 빗잔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돈을 많이 쓸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미래에 좋을까 아닐까, 계속 가슴 졸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살펴서 저희도 고칠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국민들이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결위를 할 때 국가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미래의 기금 문제는 아마 집중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갑의 무소속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 경찰 관계자분 혹시 나와 계신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한동훈 위원 제주시민들 실종의 연쇄적 암장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격이 크십니다.

실종되신 장미란 씨의 경우에 5월 15일 날 6시 43분에 112 실종신고가 됐고 그날 9시 16분, 그러니까 2시간 33분 만에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실종자가 알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색 중이던 경찰력은 철수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바로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직 사인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 그날 경찰이 그렇게 사건을 허위로 암장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들이 수색을 계속했다면 장미란 씨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그 부분은 가정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동훈 위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 그렇게 허위로 사건을 암장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시신이 그렇게 차디찬 곳에 석 달 이상 방치되지지는 않았겠지요? 가정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위의 CCTV 118개가 6월 11일까지는 확보가 가능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지금은 다 지워졌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리고 오늘 별건으로, 제가 아까 연쇄적 암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암장됐었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 정도면 연쇄사건 아닙니까?

이것 여쭙보겠습니다.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지금까지는 2건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일 처리라면 이게 2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 60대, 시신이 되신 그 시민분, 그분 관련된 CCTV는 확보돼 있습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계산상, CCTV 보존기간이 한 30일 정도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30일 정도입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60일 가까이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역시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그럴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 수준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철저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큰 문제는 그 경찰관이 돈 먹고 이런 짓 한 겁니까? 저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돈 먹고 그런 거라면 일회적인 거고 그렇지만 돈 먹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것, 그러니까 나태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수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 간에 톱니처럼 물리는 견제와 균형과 보완의 원리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의 시스템은 이렇게 한 분에게 모든 걸 맡겨 둥니까? 마치 200건을 이 사람이 혼자 했고 이분이 전에 무슨 범죄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의 문제로 몰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 당국의 문제입니까?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개인의 문제도 일부가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 저희가 팀장이나 과장이 사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것이 실종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동훈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오신 분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우면 그만이던데요, 담당자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울 때, 지우고 입력할 때 누군가의 어떤 하이어라키(hierarchy)상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없던데요? 그렇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지금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잘못이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걸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총리께 여쭙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아까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꼭 총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신고를 제주경찰이 했다면 아무리 제주경찰의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사건 관련해서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처리 프로세스상의 문제도……

○**한동훈 위원** 하나만 여쭙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은 보완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역시……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한동훈 위원** 잘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씨줄과 날줄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 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돼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완수사를 폐지함으로써 저는 없애 버렸다고 생각……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한동훈 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수사 폐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지금은 보완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이 상황들이 심각해지겠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실종사건 처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동훈 위원** 실종사건을 여쭙본 게 아니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우선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두 개는……

○**한동훈 위원** 잠시만요. 총리보다 제가 실종사건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는 거니까, 제가 그 질문 하는 건 아니고……

○**국무총리 한성숙** 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그런데 보완수사권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없애면 그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많이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보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더 잘 하시겠지만 사실 이 보완수사권 관련된 애기와 형사소송법 관련된 처음 나왔던 것들은 검찰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 아니,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능을 없애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도 실종사건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쨌든 이 보완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제가 책임지고 모든 실종사건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하고요 필요한 절차들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왜 아까 총리께 말씀드렸냐면 이런 시스템하에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 불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평범하고 힘없는 약자고 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실종신고를 했더라도 저렇게 못 했을 것 같고 총리님 같은 분은 총리님이 과거에 기업에 있을 때 하셨어도 저렇게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저도 일반인의 심정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공감하고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 수석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아까 경찰관, 경찰 출신 나오신 분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치안감입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대학 학장, 제주경찰청 차장, 굉장히 중요한 직위 같은데요, 왜 이게

다 공석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인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수사기관이 최근에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수청·공소청 등등 그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빠른 시기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공석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2024년 12월 12일입니다. 제가 당대표 쫓겨난 날인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그 이후로부터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지방선거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을 임명 안 합니다.

제가 경찰에 물어봤어요. 이것 혹시 무슨 문제 있나라고 했더니 왜 임명 안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의 경찰청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청장 자체가 수사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내란과 관련돼서? 수사가 되는 상태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 후임 경찰청장 임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기관 그다음에 검찰 관련돼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한동훈 위원** 수석님, 이재명 정권 출범이 한 3개월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 반 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위원님, 그런데 출범되고 나서 작년 한참 동안을 그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의로 파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 수석님, 또 하나 이렇게 여쭙보지요. 지금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공소청으로 바뀌지요. 그러면 검찰까지 없애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장을 이렇게 오래 비워 두는 것, 경찰은 제대로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제주청 차장 같은 건 왜 비워 둥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자리 공석에 따른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경찰 상위직급의 부재가 이러한 현장에서의 수사력의 부실함으로 반드시 이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총리나 경찰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부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스템의 부재가 맞고요. 이것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시스템의 부재라는 점에 공감하고요. 저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다수 경찰관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을 비하하거나 경찰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 이런 식의 암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다 생활인들입니다. 저녁에 술자리 하고 갈 필요도 있고 매번 월급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을 걸러 낼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고, 이 사건은 정말

제대로 파헤쳐 주셔야 한다는 점을 제가 경찰 관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차관님 오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차관 대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10월 2일부터 경천동지하게 세상이 바뀌고, 저는 지옥문이 열린다고 했는데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어요? 여기서 구멍 안 나게, 80년 동안 있었던 제도에서 구멍이 안 날 자신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입법된 범위 내에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그런데 부작용과 혼란을, 왜 알아서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수배 사건 있지요, 지명수배?

○**법무부차관 이진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 사건 중에서 중범죄 사건이 무슨 제주에서 잡혔다고 치자고요.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땠지요? 이 사람이 지명수배되면 검찰 수사관이 데리고 오고 검찰 단계에서 체포 당시로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지요.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까? 10월 2일부터는 안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소중지, 특히나 영장을 발부받은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기를 해서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주 같은 데서 잡혀서 올라오는 데만 12시간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48시간 내에 결정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진짜?

그런 경우에 중범죄가 잡혀 오면 검사 입장에서는 일단 석방 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기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배는 조사 전 단계에서 내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런 구멍들, 저는 보면 너무 많은 구멍이 보이는데 이런 구멍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말씀 맞지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록은 다 어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청 기소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기소중지 사건의 그 기록은 말씀하신 것처럼 잡혀 오면 그쪽에다가 보내야 되겠네요, 기록을?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잡혀 오기 전에 사건을 제기해서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송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 그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준비를 대검에서 기준을 마련했고 9월 중에 사건을 제기해서

체포영장이든 신병이 잡혀 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 10월부터인데요. 그러면 그 여부가 지금같은, 이 48시간 제도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시간을 저는 마련해 놓은 거라고 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혀 오면 너무, 핑퐁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이게 운영될까요? 자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존에는 검찰 수사관이 가서 직접 신병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이제는 경찰에 사건을 넘겨서 경찰이 48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한동훈 위원** 왜 이래야 되는 거지요, 이것?

○**법무부차관 이진수** 신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경찰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가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자백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구속기간 며칠 남겨 놓고 알리바이를 낸다든가 CCTV를 얘기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그냥 수사관이 직접 그 CCTV를 까 봤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못 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경찰로 보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사실관계확인권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피의자가……

○**한동훈 위원** 그건 나와 봤자 증거능력이 없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한동훈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하지만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속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구속기간의 후반쯤에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이, 구속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한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지요? 우려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법무부 시짱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보완수사요구의 형태를 기존에는 경찰에 내려보내는 형태로만 했습니다만 병존적 보완수사요구를 활용해서 경찰관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서……

○**한동훈 위원**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것은…… 병존적인 수사 협력체제요? 그건 그냥 잘해 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존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만 구속기간의 기한 내에 최대한 충실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전체로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에서 검토를 하면서 함께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쭙보지요.

제가 이진수 차관이 검사 시절에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쭙보지요.

진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과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법무부에서 무슨 무슨 위원회 같은 것, 공소취소 특공대 비슷한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것 괜찮다고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 차관님, 그동안에 정치인들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누구나 정치수사라고 해 왔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법무부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 왔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장관도 해 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몇십 년 검사 해 봤지만 이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존에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무수석께 하나 여쭙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잖아요. 삼권분립에서 우위를 가진 삼권이 있습니까, 다른 이권에 비해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상에서 국회로부터 시작돼 있지요.

○**한동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쭙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후보를 제청했는데 그것 반려하시거나 반려할 계획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정답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것을 여쭙어보지요, 그러면.

그러면 손봉기는 왜 안 되고 김민기는 왜 꼭 시켜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사권자께서는 다양한 내용과 인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고요.

○**한동훈 위원** 예, 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께 제가 이것을 여쭙어봤어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장수를 갑자기 이유 없이 자르고 설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미국에는 설명했냐 그랬더니 미국에는 아마 산업부장관이 설명할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대라,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 미국은 알고 왜 우리 국민은 몰라야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김정관 장관이 돌아오는 대로 설명해서 적절하게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본부장 교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서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상관계가 아마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의……

○**한동훈 위원** 장관님, 이렇게 여쭙어볼게요.

개인적인 비위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마찰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듣기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이미 보도되고 했다고 술자리에서의 어떤 비위 같은 겁니까? 이것 대단히 높은 고위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하신다고요, 국민들께서.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구체적인 개인 신상 관련 사항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게 어떻게 개인 신상 상황입니까? 장관이 예를 들어서 성추행 문제로 내려온다면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할 공적 사안이지 그게 그 개인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논란이 있는 거라는 것은 제가 말씀한 취지를 부인하지는 않는 거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동훈 위원** 외교부장관께 여쭙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뉘앙스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고 실제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의 포기, 완전한 비핵화의 포기,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미국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한동훈 위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미국도 아직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바꾼 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저는 답을 원하는 거지요, 검토를 바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미 대통령이, 비핵화 포기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했지요, 기자들에게?

○**외교부장관 조현**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답을 했고 저희들이 들은……

○**한동훈 위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 아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이슈에 따라서 담당자가 다 다르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다 다르고 또 때로는 입장이……

○**한동훈 위원** 미국의 대통령 아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글쎄, 미국의 대통령이 요즘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동훈 위원** 정동영 장관께 여쭙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단히 큰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은 존중합니다만, 그런데 북·미의 대화가 어떤 미국의 국내적 상황 때문에 급진전 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포기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까지도 감수하겠단, 미국이 이런 입장이라면 이것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고 사전에 막아야 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리 정부의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핵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일단 북핵 우선 중단 그다음에 감축 협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미국이 한국을 패싱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기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추정을, 예측을 하십니다만 아직 그렇게 예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만약에 그런 방향이라면 막을 생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종합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한성숙 총리께서는 제주도 그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앞으로의 대책 그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만찬 정회 전까지는 휴식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답변 중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해도 좋고요. 위원님께서도 질의 시작 전에 가급적 답변할 국무위원을 미리 특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을의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 위원** 제 질의는 국무총리님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2025년 결산에 대한 질의가 마치 2026년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셔서 좀 시계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스럭 소리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던 저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있고요, 허중식 국회의원도 매우 어려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2024년도에 법정 활동을 만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해산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 그다음에 국가연구재단을 설립할 것, 추가 진상규명 체계를 구축할 것을 포함한 11개의 과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헌법전문 수록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 부분은 아직……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뒤늦게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국회의원이 최근에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기사로 봤습니다.

○**김현 위원**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소요 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 그리고 전두환이 살인마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남의 전근대성, 낙후하다는 점을 거론한 바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국회에서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저런 포럼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좀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과반 의석, 과반 찬성으로 1년 정도 직무를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께서 당대표의 발언을 빙자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추가 진상규명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나 2차 가해가 있는 주장이 버젓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확실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이게 국회의원이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공개적으로 소요 사태, 전두환에 대한 살인마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 그다음에 호남을 비하하는, 광주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이후로 대통령께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것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아울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저희가 국회에서 할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정보통신망법까지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다음으로는 디지털배움터 관련해서 2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 오는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많은 과제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도 받았지만 실제로 디지털배움터가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이 돼서 되게 많은 곳에 이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두의 AI 얘기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과 또 예산의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PPT에서도 보이지만 지특회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현 위원** 80 대 20인데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디지털 격차는 계속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포용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업들을 제기하도록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해 온 NIA나 저희 과기정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또 시도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아직도 많습니다.

○**김현 위원**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회의원이 저희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못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디지털배움터가 꾸준히 확산되고 그리고 2030년까지 하겠다는 그 계획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표에서 본 것처럼 경남, 전북, 충북, 경기, 충남은 71%로 제대로…… 어쨌든 기준점 높은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부산, 울산은 단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지역 편차가 사실은……

스마트경로당은 건강체조, 노래교실, 보건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측정 기기를 이용해서 건강 관리도 하는 그런 게 바로 스마트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편차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러면 앞서 얘기했던 디지털배움터와 마찬가지로 격차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특별히 저렇게 저조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편중된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AI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스마트 경로당이나 디지털배움터가 각 부처의 칸막이를 최소화시켜서……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로 격상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총리가 아닌 시절의 장관 때와 같이 좀 제한적인 게 아니라 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스마트경로당과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격차 해소 또한 AI디지털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의 AI디지털배움터 또 스마트경로당 그 거점으로는 현장에 있는 많은 디지털 역량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총리님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예컨대 교육부의 평생학습관이 전국에 512개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는 한 1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들의 현장 거점들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촘촘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난해는 우리 정부가 등장한 지 6개월 채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자는 취지이고요.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모두의 AI를 위해서 스마트경로당·디지털배움터가 각 부처가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독과모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2G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매우 잘해야지만 개발된 그 기술을 제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길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짧게만 답변드릴까요?

○김현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보면 부처 간 사업들이 이렇게 스마트경로당, 개별 사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 개별 사업의 개수를 계속 점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총량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교육과 관련해서 초중고 연령대별로 또 평생교육 단위로 전체 센터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센터 규모를 보고 과제를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의 어느 지역이 부족한지를 좀 내고 있으니까 정리되고 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님, 5·18 폼훼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국무총리께도 여쭙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서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해서 혹은 혐오표현 등에 대해서 불법정보화된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형 게재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서 법원의 판결까지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5·18 특별법이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5·18 관련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벌어졌던 일 중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번 국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에서 팩트체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허위조작정보를, 갈등의 요소로 작동하게 됐고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표적감사를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대표 한 사람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미통위에서 가서 사과를 했지만 이것이 사과로 그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 수사나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방미통위 입장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전 구 방통위 체제에서 팩트체크 사업이 표적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구 방통위가 여기에 좀 관련되어져서 기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표적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절차를 거쳐서 당시 원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고 관련 문책 요구를 취소하고 수사의뢰 조치도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처의 담당자들이 당사자에게 가서 저희 위원회의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김현 위원** 이진숙 국회의원입니다. 방통위 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재 처분을 7억 5000을 내렸는데요. 그때 윤석열 씨가 탄핵되던 당일 날이었습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런 문제를 행정청에서 무리한 처분

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방미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재심을 통해서 원처분을……

○**김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재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철회를 했지만 그 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었던 사람,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여쭙보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관련 감사들을 진행했고 그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당시에 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관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현 위원** 위원장이 관여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고 처분을 내렸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 조치를 다 철회했지만 2025년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감사와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국회에서 팩트체크넷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면 투명지원센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법을 또 만들어서 시간을 끌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팩트체크 사업은 허위 조작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민사회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정부의 정치화된 결정에 의해서 지체됨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회적 손실을 겪었고 정보통신방법에 의해서 새롭게 팩트체크 사업이 구축되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법정 제재부가금이 7억 5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은 사람은 지금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빠띠라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일하던 직원은 강등돼서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 사실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구 방통위 시절에 벌어졌던, 윤석열 정권하에 벌어졌던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만 방미통위가 제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방통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에서 진실과 화해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지만 TBS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160여 명의 직원들이 2년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TBS 종사자들 160명이, 고급인력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문제는 그 일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자리가…… 이렇게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속도 있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TBS 사태로 인해서 특히 종사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TBS 재허가를 나쁜 조건 속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허용을 했고 상업광고를 허용을 하고 또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 추천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기대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한계가 있어서 TBS가 현재 요청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당사자들과 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김현 위원** 방미통위원장님이 이 TBS 문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위원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할 때 TBS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실은 지난해 저희 정부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역방송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지역방송이란 서울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서울시 일부와 서울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것을 지상파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재정경제부장관님이신데요. 사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방송발전기금으로 TBS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다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TBS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고 TBS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획예산처장관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국민의힘의 박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 박상웅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대참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아, 그래요?

행안부장관님을 대신해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행안부차관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두 분께 같이 여쭙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임용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인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행안부는 2376명 가운데 검사가 몇 명 신청했는지 검찰수사관이 몇 명인지 직급별로는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대답하시든 행안부에서 대답하시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인사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와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응모한 분들 그 현황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2376명 가운데 지금 신청한 현직 검사는 정확하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한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왜 그러냐면 상당 계급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검사는 구체적인 직급이 없지 않습니까?

○**박상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 검사급은 2급 상당, 그 밖의 검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현재 실제 지원 검사는 100여 명 수준이랍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뭐 그렇게……

○**박상웅 위원** 그러면 검찰 현 인원수의 5%에 불과한 정도가 지원했다는 겁니다. 전체 지원율이 정원의 82.6%라고 하니까 거의 중수청 출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설계할 검사 출신 전문인력이 얼마나 확보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쯤은 국민과 국회에 진행 과정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지금 특례임용에 신청을 한 모든 신청자가 중수청으로 임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직급별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특별경력채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충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개인명단을 공개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지검장급이 몇 명, 부장급이 몇 명, 평검사급이 몇 명 정도는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추세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깐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월 2일 개청을 할 때 검사 출신 수사관들이 적어도 몇 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지

적해 주신 것처럼 중수청 수사관 직급 체계는 1~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에 따라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수사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수 지원하셔서 훌륭한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만 국민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주요 요직에 있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직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행안부장관이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법령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께서 1~5급 되어 있고요. 6급 이하는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는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1~2급은 대통령 인사권, 3~5급은 행정안전부장관 그다음에 5급 전보 권한과 6급 이하는 중수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대통령이 1급·2급의 주요 중수청 간부는 직접 임명을 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일반공무원도 다 그렇게, 고공단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박상웅 위원 이게 일반공무원이라고 보기에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이 아니었는데 일반공무원처럼 취급을 하고 이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직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의 동료가 검찰 출신 중수청 수사관으로, 그리고 공소청 검사로 갈라져서 서로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어떤 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차단장치나 견제장치를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래도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상호 협조해서 추진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보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제가 오늘 여러 정부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문할 내용이 많았는데 바로 10월 2일 날 눈앞에 있는 개청을 앞둔 중수청 문제에 대해서—저는 행안위 소속입니다. 매우 관심이 많은데—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밝혀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좀 안개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수청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건비나 조직관리비, 기타 특활비 등을 다 포함하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일단 중수청이 10월 2일 개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기예처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개청을 하면 4분기에 예산은 현재 대검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법무부로부터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안은 지금 자료를 잘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도 27년 중수청 예산 정부안은 약 4724억 반영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예정입니까, 기존의 경찰간부 중에서 임

명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무직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이 이와 관계없이 관리·행정 능력을 봐서 일반 공직자 중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다만 법령에,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국민 천거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좋은 분으로 추천된 것을 대통령님께 제청하면 대통령님께서 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좋은 분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장윤기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극으로 밝혀진 제주도 실종 여성 문제, 기타 경찰에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사죄해야 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와 문화이 부분들을 보면 경찰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자주 보도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워낙 사안이 있을 때마다 쇄신안을 발표하고 해서 그동안 쇄신안 발표 이후에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몇 차례나 쇄신안을 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안부차관님. 경찰에서는 실무자도 잘 모르고 쇄신안을 몇 번 발표했는지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경찰이 쇄신안을 내고 각오를 밝히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이 이 10년 동안 몇 번 쇄신안을 내고 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경찰 조직을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에 경찰 수사권 독점 상황이 오면 이런 경찰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사적 접촉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경찰에 직접 자료를 받았어요. 퇴임한 경찰간부가 남아 있는 경찰과 어떻게 사적 접촉을 하고 특이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받을 만한 접촉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지난 한 7년 동안 약 한 167건의 사적 접촉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것을 신고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했는데 놀랍게도 단 1건도 시정조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경고를 주거나 그것이 경찰 내부에서 밝혀져서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큰일이다 이거지요.

이래서 사적 접촉은, 이제 검경이 분리돼서 수사권·공소권이 달라지고 또 중수청이 별도로 발족하면서 검찰 상호 간에, 경찰 상호 간에 이런 어떤 사적 유착관계가 그림자처럼 형성된다면 우리는 어떤 국가적 쇄신을 이룬 게 아니라 더 큰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터전만 마련해 줬다 이렇게 오명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차관님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또 최근에 경찰 고위간부들이 퇴직을 하면서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펌으로 취직을 할 때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상웅 위원 그 심사에서 처음에는 거의 원하는 대로 다 갔는데 해가 갈수록 막히는, 거부되는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수사를 전담하고 지휘하던 사람이 어떤 특정 로펌에 가서 그 사건을 도로 변호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 해서 거의 한 60~70% 정도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깊이 살펴보셔야 된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안으로도 잘 보완을 해야 된다, 정부 측에서.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박상웅 위원 공무원들이 연금을 내고 그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이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12조 4660 이 정도로 나갑니다. 여유자금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25년도 말에 공무원연금공단 여유자금 규모는 12조 4667억인데 24년도보다도 28.2%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유자금이 증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해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본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PPT 나오나요? 안 나오나……

윤석열 정부 당시인 24년도 10월에 수립한 자산배분안에는 국내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13.2%에서 26년도에는 11.6%로 그리고 29년도에는 7%로 주식 비중을 줄인다, 그런데 다시 1년 뒤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방향이 또 바뀝니다. 7%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29년도도 역시 10% 이상으로 유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증시 활성화와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강조하던 시점에 공무원연금의 운용 방향까지 바꿨다면 공단의 독립적인 판단이었는지, 어떤 정부의 고위 권력이 그런 부분을 권고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79조는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투자결정과 위험관리의 기준과 절차, 투자자산별 배분 등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박상웅 위원 공무원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혹시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요청·권고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공단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당시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이번 국내주식 비중 확대가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공단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국내주식 비중을 높였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공무원의 노후자금인 공적연금이 혹시 정부의 증시 부양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상웅 위원 옆에 계신 김호철 감사원장님, 공적연금의 자산배분은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상웅 위원 만약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춰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 판단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상웅 위원 공무원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변경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국가재정법과 자산운용지침이 정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사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만약 정부 관계자가 정책목표를 이유로 공단의 독립적인 투자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도 당연히 감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공단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 요구가 실제 자산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해 공무원연금기금 운용 실태를 감사원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저희는 연기금 운용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잘 발휘되도록 늘 잘 살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 반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정작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은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공단은 기금의 안정성과 손실 위험 등을 고려해 운용지침상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연금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적연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이중 잣대다. 공무원연금은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에서 빼고 정작 개인 투자자에게는 ETF에 투자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고 오히려 이걸 장려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해서 올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까지도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렇게 했는지, 공적연금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았던 것인지 이것도 감사원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참 좋겠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감사원은 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공단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그런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레버리지 ETF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개인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했던 취지와 상관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것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후속 조치들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되는데 24년 10월에 공무원연금 주식 비중을 낮추도록 결정을 했다, 29년도에는 한 7% 정도로. 그런데 그게 작년 6월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10월에 바로 그걸 다시 재조정했어요, 내리지는 못하도록. 그러면 공무원연금 그 자금을 주식 투자 자금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누군가가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정하게 했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는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박상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재**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의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현 위원** 경기 고양병의 이기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총리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기현 위원** 대단히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첫째, 작년에 미국을 방문해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본인께서는 페이스메이커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총리님, 혹시 마라톤이나 자전거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되게 달리는 사람을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기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앞에서 바람도 막아 주고 속도도 조절을 해 줘서 플레이어가 예상하는, 목표하는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인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가 남북관계를 둘러싼,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있어서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건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국이 이번에 한미군사훈련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당입니다만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스처였습니다. 심지어 하루이틀 지나서는 북한에 57개의 핵무기가 있다라고까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북·미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하면 미국이 이미 이란전에서 발을 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의 패배가 가시적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11월 중간선거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음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 군사훈련 관련해서 대단히 강한 저항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북이 군사훈련을 하면 자기들도 미사일 쏘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당근, 유인책들도 던져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그냥 계속 유지돼 왔던 것이 아니라 축소의 역사를 걸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팀스피리트 훈련 이런 것 있었습니다. 그게 94년도에 폐지가 된 다음에 아시겠지만 키 리졸브 훈련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그다음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에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을지 방패 연습인가요, 이것으로 이제 통합됐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맞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미연합훈련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쟁의 양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도발과 그것의 방어가 군사훈련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기동 훈련보다는 지휘소 훈련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저희 한미군사훈련도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 이제는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 훈련에서 대대급 실기동 훈련이, 그것도 연중 분산 배치되어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때로는 같이, 때로는 분리해서. 이렇게 군사훈련도 계속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치면, 미국이 이러한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과 국내 정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 저희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했어야 한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부, 안보라인이 가져야 될 자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릴 정도까지 조예가 깊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이번 사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아무도 모르는 채로 SNS에 올리시면서 시작된 일이지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용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연습 축소 관련된 부분들의 말씀들도 계속 나누고 계속 끌어가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북·미 회담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11월 달에 선전 APEC 아니면 몽골 등 제삼국에서의 개최, 다자 회담을 취할지 양자 회담으로 가져갈지 이런 논의들이 북과 미 측에서 아마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통일부장관님께도 묻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이걸 우리가 먼저 제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미국이 갑작스럽게 던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국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부에서, 특히 안보라인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정말 각성을 촉구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저기 계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님 나와 계십니다만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국방부 총괄해서 안보라인 전체가 이 문제 관련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권해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북의 통신선이 두절된 것입니다. 군으로 치면 통신선이 두절돼 있고, 통일부와 국정원으로 치면 정무적 대화의 틀이 지금 봉쇄되어 있고 다시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신속한 복원이 진행되어야, 북·미 대화 이후에 한반도에 어떤 정세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에 저희가 정말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제삼자처럼 구경만 하는 이런 역할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남북의 긴 급통신선 그리고 정무적 라인의 복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정무수석님 나와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주무부서인 통일부장관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대북 정책에 최우선적 과제를 두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유의해서 남북관계 복원할 때 최우선 과제로 통일부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국방부장관입니다.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예,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행정부에서 외교라인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CPX하고 FTX 훈련을 비교해 보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횡수하고 금년 횡수를 비교해 보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웅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군과의 실기동 훈련을 분리해서 하더라도 미국 측이,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수준의 실기동 훈련도 일정하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 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숫자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그 숫자는 좀 연중으로 균질하게, 균등하게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북·미회담 이후에 내년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치러 낼지 이것도 국방부의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자 그대로 연합은 연합입니다. 단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 횡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또 양국의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는 동맹관계를 넘은 다임(DIME) 요소가 포함된, 외교·안보·경제·정보, 다임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 동맹관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 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미군사훈련 이외에도 행정부가, 안보라인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박홍근 장관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91년 정부가 출연한 이후에 남북협력기금이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습니다. 35년이 됐네요.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기현 위원 기금의 운용 실태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공적 자원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0년도에 있었던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교류는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16년도에 있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 거의 남북 경협이라든지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어 왔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최근 10년간 그런 남북관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금의 편성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거나 또 집행률도 낮은 편입니다.

○이기현 위원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다 보니까 기금 실집행률도 대단히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연 2~3%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어 왔습니다. 25년

도에도 7981억 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됐지만 추경 때 3200억 감액되고 그리고 집행행 비용은 165억, 초라하게 3.5% 수준에서 집행률이 멈추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정말로 오랜 시간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적 조성액 가운데 60%가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온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다 알다시피 원금도 이자도 상환해야 하는 그런 재원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남북 교류가 국제적 정세, 북남 간의 관계에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멈춰 섰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대부분 쓰이지 않고 불용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예산의 운용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런 계정이 아니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개선 방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일각에서는 그 전에 소위 통일까지 대비하면서 별도의 기금을 적립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조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자기금 예수금이 한 0.9조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0.1조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은 그런 겁니다. 정부가 매년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조 이상의 운용을 하는데 집행 가능성이 낮는데 이렇게 기금에 과도하게 적립했을 경우에 당연히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 배정도 차질 없이 하겠고 또 기금운용변경이라든가 예비비 등을 통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충분히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동영 장관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지금 준비 중에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이기현 위원 여기에는 정책연구,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지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역대 정부가 사실은 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사업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료하게 용처를 시행령에 못 박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또 민간 통일운동 지원 그리고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번영의 공간이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

어저야 한다는 그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기현 위원 특구가 실제적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에 이 자금이 소요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동의합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무회의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이기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홍근 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기금의 용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고 그리고 재정 운용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습시다만 저는 독일이 오래 전에 통일해서 저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한때 저희가 공부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통일 전에는 통일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기금을 만들었습니다. 90년에 만든 돈이 5년 동안—90년서부터—총 1150억 마르크였는데 이것이 5년 동안 82%, 950억 마르크가 차입에 의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하게는 기금 일부분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해 가지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러운 남북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아직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가 일반회계에서뿐만 아니라 공자기금에서 빌려 와서 기금을 해 놓고 또 집행률을 낮추다 보니까 다시 그 과정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류협력,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기금이고. 별도의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시행령 개정으로 넓혀 가지고 기반이라든가 접경지역까지 하기에는 저희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기재부장관님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가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필요하다면 그건 법 개정을 국회에서 정부의 동의하에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기현 위원 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현재 저희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아시다시피 MB 때, 이명박 정권 때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계정으로 신설하려고 준비했다가 박근혜정부 때 무산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것 관련해서 의원입법이 있었고 최근에도 김영배 의원님 등의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테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시간이 잠깐 남아서 문체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에만 해도 내한공연이 약 14.3%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이기현 위원 공연 공간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이기현 위원 대통령 공약 중에 5만 석 아레나가 공약돼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것의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지금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공연, 콘서트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5만 석 이상의 대규모 돐구장 하나를 포함해서 2개의 돐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케이팝, K-컬처가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한공연도 많고 대한민국 가수들의 국내 공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은 많은데 이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케이팝, K-컬처의 역량이 최고로 있을 때 그것을 담는 그릇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케이팝, 대통령이 공약했던 아레나 5만 석의 공약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올해 연말에 5만 석짜리에 대한 부지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1년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그것이 공사 기간까지 하면 35년에나 완공이 됩니다. 대통령이 퇴임하신 이후에, 그 후 5년 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5만 석이라는 걸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놓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경기도 사업이니까,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니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가 여러 번 촉구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도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매년 BTS뿐만 아니라 세계적 그룹들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이팝 공연장 자체는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숙박, 관광, 먹거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체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중에 관광이든 숙박이든 이것은 민간이 처리하더라도 저는 체험시설 정도는 문체부에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아레나에 공용적으로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체부장관님,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연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랜드마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돐구장을 추진하는 거지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

는 시설 그다음에 복합 아레나 같은 소·중형 공연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콘텐츠와 함께 결합하는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또 추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험시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연만 보는 것 가지고는 대행사의 수익 이외에 지역 경제에 퍼지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님 전공 분야이실 테니까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수도권 5만 석과 관련해서는 걱정되는 게 체육시설과 복합시설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행사에 대한 우선권 부여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단히 충돌이 일어나고 실제 5만 석이 지어진 이후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케이팝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건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를 우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문체부의 속도로는 케이팝, K-컬처의 능선을 넘어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공간이 받쳐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문체부는 정말로 열심히 전투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진격전을 벌여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석 이상 규모의 랜드마크적 돐구장 건설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하나씩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매우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실 MICE 단지를 만드는 데 3만 석의 돐구장 그리고 3개가량의 호텔 그리고 전시관을 짓는 데, 사실 문체부장관께도 지난번 말씀드렸습시다만 거기를 조금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5만 석 규모로 바꾸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또는 스포츠의 어떤 상징 공간으로서 매우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민자투자 심의기간이 거의 다 도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런 요청을 제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좀 더 기간이, 다시 절차를 밟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해드릴 테니 또 필요하다면 여러 투자도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 우리 야구 팬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문화의 수준을 감안하여 5만 석 규모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10년 동안 이미 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아쉬운 그런 결정을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매우,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아쉬운 그런 사업이고요.

이후에 그곳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또는 지방 안에서도 신속하게 돝구장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저로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의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관련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장관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총리님께는 매크로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우리나라 나라 빛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 국가채무는 141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오늘 아침에 부총리가 결산 제안설명서라는 걸 통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채무가 1305조라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자료……

○박수영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우리 국가부채가 2772조라고 그다음 쪽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총리님, 도대체 이게…… 4쪽과 5쪽과의 차이는, 4쪽에서 말한 1300조의 2배가 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고 어느 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입니까, 나라 빛은 어느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두 번째 관련된 부분들은 저기 있는 대로 국고채 다 합쳐 가지고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총리님께서 예산 재정 전문가가 아니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똑같은 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2배나 차이 나는 숫자가 보고된다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제기구, IMF나 OECD에서 도대체 몇 가지 종류로,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분류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IMF는 부채의 종류 네 가지, 부채의 주체 다섯 가지, 이걸 조합하면 한 스무 가지 정도의 국가부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국제기준을 위해서는 일반정부 부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총리가 답변한 4쪽과 5쪽에 있는 숫자는 이것 어느 것하고도 맞지 않는 걸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L3와 D4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정부 부채 이것을 재경부가 앞으로는 발표해야 될 것이고 총리님께서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관심 가지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IMF의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스무 가지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 학자들이 네 가지 기준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D1·D2·D3·D4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중에 D1은 단식부기, 현금주의입니다. 그리고 D2부터는 발생주의로 구성이 되게 되고, 총리님께서도 한번 쪽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1이라고 하는 개념, 4쪽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 이 두 가지 합친 것이고 D2 이게 국제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와 국제 비교할 때는 D2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D1에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영리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 텐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쳐서 D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3·D4가 있는데 D4는 군인·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니다.

총리님, 네이버에 근무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민간기업에서는 현금주의로 계산합니까, 발생주의로 계산을 합니까? 현금주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식부기이고 발생주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민간에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보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어서 정확히 어떤 저기를 보는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개념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CFO 조직 외에는 그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 주셨던 부분들과 연결돼 있다 생각되는데요 사업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놓고 사업을 풀어 갑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경영학과 나온 사람 정도는 다 아는데 총리님이 영문과 나오셔서 그러신가……

민간기업은 전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로 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요. 과거의 일이고 전부 복식부기로, 상법도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페이지에서 발표했던 부총리의 숫자 이것은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D1·D2·D3·D4와는 전혀 다른 부채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총리와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숫자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2배 이상 차이 나는 국가부채를 나랏빚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세부적인 부분은 부총리가 추가로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부총리한테 또 물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것은 물을 예정입니다.

국제기준은 D2인데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총리님, 경제부처 장관들도 다 다른 나라 것은 D2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것은 D1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을 제가 수차례 경제부처에 얘기를 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D2 기준으로 하면 다른 나라보다 부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부분도 부총리가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부총리한테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제 비교 기준인 D2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기축통화국하고 비기축통화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입니까, 비기축통화국입니까? 그건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비기축통화국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비기축통화국 11개 국가랑 비교를 해 놓은 슬라이드를 제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이 우리나라 거고요 하얀색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평균을 보시면 올해는 우리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GDP 대비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급속도로 올라가서 2031년이 되면 무려 8.7%p 차이가 날 거다, 이게 IMF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국제기준인 D2로 보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겠다, 이것은 개념은 몰라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인데, 우리 기준을 D2하고 D1이 있고 D4까지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것은 상식적이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비교 대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동일하게 놓고 해야 되겠지요.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총리까지 전부 우리나라 것은 D1을 대고 다른 나라 것은 D2를 대서 마치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작은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무총리 한성숙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박수영 위원 물론 제가 부총리한테 또 질문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D2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부채를 담기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D2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군인·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법률에 들어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D4를 안 하는 이유가 총당부채가 법적인 부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인 부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조문을 내놨는데 이 조문을, 완전히 포폴리즘이지요. 국가가 펑크 나면 갚아 주겠다, 적자 나면 갚겠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식부기로 보면 이미 부채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이 D4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D4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면, 이게 D1부터 D4까지를 제가 숫자를 표시해 놓은 것인데 D1은 부총리께서 꼭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D2·D3는 2년 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자료가 24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

지어 D4는 기재부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재경부에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실에서 추계를 해서 지금 2024년까지 발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5년에 국민연금 총당부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추계하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GDP 대비 20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GDP 대비 이게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확장재정을 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부총리한테 넘기시니까 제가 부총리한테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총리님, IT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총리로 발탁되신 거고. IT 전문가인데 우리나라가 D2나 D3 이것을 2년이나 뒤에, 1년과 그다음 해 12월에 발표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2년이나 뒤에 발표할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나요? 좀 IT를 통해서 당길 수 없을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IT 전문가…… 저 부분은 조금 다른 영역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박수영 위원 총리님 그러면 전공이 뭐니까? 뭘 물어보면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세제도 어렵고 전부 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추경예산, 오늘 주제가 결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추경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질문 주시고 나니까 머리가 세서…… 오늘 아주 데뷔전을……

○박수영 위원 1차에 우리가 13조 8000억, 2차에 31조 8000억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 총규모는 45조 6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을 했으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45조 같으면. 이 돈을 편성했으면 집행률이,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 하자고 억지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밀어붙여서 했으면 집행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1차 추경은 16%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2차 추경은 6%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평균적으로 두 번의 추경의 10.8%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까운 돈을 편성했으면 빨리빨리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채도 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랏빚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작년 내내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의 세부 사업을 보면……

총리님께서 중기부장관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박수영 위원 중기부 사업의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이것을 3000억 추정 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실제 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위원님, 펀드 구성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이 펀드에 출자를 해 놓는 것과 그다음에 그 뒤에 어느 기업들을 어떻게 넣는 것들의 시차 부분의 차이들이 좀, 반영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넣었던 3000억 모태펀드에서 충분히 출자될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연도별로 운용사들이 있고 운용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투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따라 운용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갈 거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은 국감에서도 매번 지적 주셨던 부분들이라 집행이 잘되도록 계속 독려해야 되는 부분……

○박수영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정권하고 비교를 해 본 표가 앞쪽에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면 윤석열 정권 때는 추경의 미집행률이 6.8%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보시다시피 다 10%를 넘는 정도의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님 말씀 주셨으니까, 약속 주셨으니까 집행률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장관님들께 물어야 될 것 같네요.

작년에 초유의 국방 예산 미지급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지급 사태가?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이것 왜 연말에 지급을 못 하고 이월을 시켜서 연초에 했습니까? 사실 민간기업, 총리님 민간기업 출신인데 민간기업 같으면 연말에 줘야 될 돈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연초에 준다 이것은 은행권에서 부도를 막아 주지 않는 이상은 부도나 마찬가지로 상황이거든요.

1조 30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작년의 국방비 같으면, 국방비는 주로 12월 달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가 워낙 어려웠니까 조기 집행을 촉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는 집행이 아주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국방부 쪽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했는데 또 하필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3조 900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일어나 가지고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월 단위로 집행을 독려하고 또 국방비도 연도 말에, 12월 달에 하

보니까 이게 집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지역은 집행이 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을 주고 세외수입은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필수자금 같은 경우는 진짜 별도로 계리를 해 가지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올해 1월 3일 연초에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입장을 보면 ‘국방부와 방사청이 연말에 너무 늦게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을 해 주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집행이 좀 더딜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집행이 되니까, 신청 오니까…… 저희들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잡혀 있었고 집행이 된다 해서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

○박수영 위원 국방부장관님, 1월 7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절차와 시기를 준수해서 진행했는데 예산을 늦게 신청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부총리는 ‘늦게 신청해서 못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방부장관님은 ‘늦게 신청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실무자 간에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미집행분을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수영 위원 연초에 집행했는데 그게 초유의 사태라는 거지요. 1조 3000억 원에 대한 국방비 지급을 안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방사청은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지급 이것까지 전부 해서 적은 돈이 아니라 1조 3000억이 이렇게 핑크가 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이 다르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부총리님, 올해부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도 개편하고요. 주요 사업……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또 발생하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제가 물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가는 총리님한테 할까요, 부총리님한테 할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한테 하세요.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온라인에 이런 게시물이 지금 떠 있습니다. ‘윤석열 때가 태평성대였다. 왜냐? 나라의 제일 큰 고민이 대과가 비싸다는 거였다’ 이게 인기 저절로 인터넷에 지금 떠 있는, 온라인상에 떠 있는 게시물입니다. 대과 비싸다고 난리를 쳤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대과가 아니라 지금 물가는 그때 대과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당시에 대과 1kg 가격이 2440원이었는데 지금 대과 1kg은 3100원, 그때보다 무려 700원이나 더 올라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식료품들 가격도 보시면 계란이

무려 17%, 쌀은 13%, 김이 13%, 김밥도 지금 한 줄에 4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요새 ‘김밥’이 아니라—기본 김밥입니다—‘금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란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고……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제가 보는 시각과 너무 다릅니다. 개별 종목의 문제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다른 정권, 다른 시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가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느끼실 거고요 부총리님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증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2 증가율과 증가량을 보시면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증가량도 엄청난, 528조 증가를 했고 증가율도 12.2% 증가를 해서 다른 정권, 옆에 보시면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까지 했던 것보다 5~6배 이렇게 M2가 풀어지니까 화폐가 증가하는데 물가가 오르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의 문제에 천착하지 마시고 적어도 나라 경제를 전부 책임지시는 부총리님이시니까 M2에 대한 문제 이것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박홍근 장관님이 편성하는 예산처럼 슈퍼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면 M2는 더 늘어나고 물가는 더 올라가서 일반 서민들 고통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것을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더 질문할 수는 없는데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고, 일단 민생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정이 파탄 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물가는 저희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인데요, 저희들이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녜, 개별 품목별로 저희들은 물가상승 요인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작황이 안 좋고 어떤 부분은 또 조류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과 함께 지금 말씀 주신, 전체적으로 총통화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통계로 보면 2005년에서 2025년까지는 장기 평균 한 7.5%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 줄여 보려고 하는데 또 대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외에서 국내에 투자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저는 그걸 스테릴라이제이션(sterilization) 그러는데 이것 좀 태화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 주시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통화도 잘 관리하고 개별 품목별 이슈에 대해서도 그 품목별로 문제 해결을 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가부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총리님께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D1이 옳고 D2가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국제적으로 다 쓰고 있는 개념들이고 D1이나 D2나 다 국제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D1은 알다시피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금주의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D1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국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D2를 다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러 번 재정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D4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것까지 다, 이런 큰 규모로 커질 텐데 이런 것을 혹시 집계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사실 그 어느 나라도 이 D4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산출 중인 국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산출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결산이 5월 말에 진행이,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로 제출할 때 재무제표상에는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적 기준 그다음에 국내의 현실적인 측면 그다음에 국제 간의 비교 이런 것을 다 감안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우리가 축소하려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박수영 위원 추가질의 때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이광재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회에 와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주로 했는데 여당이 되면 D1으로 하고 야당이 되면 D2로 공격하고 이게 아주 일상적인 관행이었는데 통계가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고 과학이 되려면 아까 좀 전에 박홍근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D1·D2를 어떤 기준에 맞게 명확하게 문서로서 기술하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충남·논산·계룡·금산의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 논산·계룡·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 왔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 구조화된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리고 크나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1%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털어내고 반등의 계기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황명선 위원** 저는 통계, 지표 여쭙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감사합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통계 얘기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한성숙**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건 계속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3%대로 상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무엇보다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인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수출을 굉장히 잘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물가위기 말씀하셨지만 중동전쟁 때 사실 구운철 경제부총리를 위시로 해서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이 물가 관련된 관리 회의를 거의 매일 하고 텔레그램 수준으로 거의 정말 신호등 관리하듯이 해서 관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했던 각종 정책들이 같이 물려서 그것이 작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중요했다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는 내년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가 100조 그리고 최대 130조 정도 달할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이 되지요.

총리님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나 성장률 3%와 막대한 세수 성과 뒤에는 착시현상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한 해의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슈퍼사이클 반도체 매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툭툭 튀는 데가 1995년도 1차부터 2000년도 2차 그리고 2024년도 다섯 번째,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1차부터 2차, 3차, 5차가 있는데 다들 꼭짓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또 하향되는 경우가 있지요. 모두 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있어요. 앞서 IT 기기 교체 수요 종료로 가격이 급락했던 네 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달리 이번 다섯 번 사이클은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해 하락 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이걸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게 2~3년 갈 거다라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AI 수요가 폭발하면

계속 장기추세선으로 갈 거라는 얘기들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요, 몇 년에서 길게는 또 이삼십 년도 갈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호황기는 언젠가는 하강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금 이번 호황기는 단순한 단기 경기반등으로 끝낼 것인지 세계 무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제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결정하는 아주 중대의 기로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두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 해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가 정말 이번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대기업들 위주의 구조로 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정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말 전환의 시기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명선 위원** 저는 그 지점에서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서 거둬들일 막대한 법인세와 초과세수를 당장 우리가 경상지출로 모두 소진하지 않고 국가 미래에 대한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 두는 저축통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오늘의 호황과 세수를 내일의 성장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국가전략 투자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기금 이름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기금이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적어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네 가지 분야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황명선 위원**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청년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동력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지방 균형성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과 인재 부분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그렇게 다 꿰뚫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기 써 놓으신 것 잘 봤습니다.

○**황명선 위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결국은 골고루 잘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양극화도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도시 극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자치와 분권을 통한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저는 그런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고요.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파이를 나누는 정책이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수도권의 일극 집중을 극복하고 전국의 첨단산업 밸류 업을 구축하는 것이 곧 미래를 향한 우리 국가의 성장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저는 나라를 넓게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놓았던 것에서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커져서 다른 지역들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경제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라를 넓게 쓴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 대한민국을 넓게 쓰자, 국가가 균형발전하는 대한민국.

총리님,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성공하려면 저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첫째는, 지방 법정 재원을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된다. 초과세수를 기금화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법정 재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미래 투자는 확대하되 지방의 법정 재원은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지방 관련된 부분의 균형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이름과 구조가 조금 변경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의 교육에 관련된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더 많은 투자가 지방에 이루어져 가는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평가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냐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업 투자에 대한 금액, 청년의 일자리 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체크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총리님, 투입 예산 규모가 아닌 실질적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일할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지, 주로 KPI라고 많이 이야기하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내고 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일할 건지를 잘 정비해 보고 그 목표를 잘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성과가 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성장률 3%도 중요합니다. 수출 4강도 중요하고요 국민소득 5만 달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국가가 내 삶을 지켜 줘는가, 내 삶이 더 나아졌는가 이게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 나라가 아니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게 바로 기본사회겠지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살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 잘 담아서 미래대응기금 준비하는 데도 기

본방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난 1년이 경제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경제 대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미래 투자로, 미래 투자에서 국민의 기회로 가야 합니다. 잘될 때 더 멀리 준비하는 나라, 성장할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야 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국무위원님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연일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몸무게도 빠져 보이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황명선 위원**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6년도 2만 7000가구에서 27년 1만 7000가구로 약 36.7%가 급감을 합니다. 시장 적정 수요인 연간 4만에서 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심각한 공급절벽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입주 물량은 착공 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결정이 됩니다. 결국 21년도 보궐선거 복귀한 이후 5년 넘게 서울시를 이끌어 온 오세훈 시장의 착공 부진이 오늘의 공급절벽을 초래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31만 가구 착공, 9만 호 순증을 장담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은 1만 5000가구로 직전 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서울정비사업으로 31만 2000호가 건립되었으나 멸실이 25만 9000호에 달해 실제 순증은 연평균 3819호로 건립 세대수의 17.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만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주장이 사실상 허구임이 증명된 셈이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명선 위원** 서울시장 한 명의 정치적 셈법과 비협조로 도심 주택공급 전체가 발목 잡히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명선 위원** 어제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기초지방정부 장에게 이양하고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역시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저는 단호히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황명선 위원**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뵈었는데요. 대화가 잘되는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은 1차 협의는 잘 안 났고요. 이번주 중에, 아마 내일모

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용산공원과 관련된 녹지공간은 기본적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공간이 아닌 쓸모 없는 공원의 유희지를 우리는 주택공급으로, 대체부지로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명선 위원** 이런 정도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어쨌든 현재 용산공원 내에 있는, 이미 용산공원 내에 미군들이 쓰던 장군 숙소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구 방사청 부지와 같은 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택을 또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지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용산공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과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국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 또 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 용산공원 내의 일부 제한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주택공급은 이 시대의 아주 굉장히 절박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총리님과 이 자리에 국무위원님들 다 함께 계신데요. 이것은 서울시장하고 대화를 해서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각 정부부처 모든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유희지나 땅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토부장관님께서서는 광역정부, 서울시장을 만나서 그 없는 땅이라도, 용산공원의 자투리 땅이라도 공급대책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문제는 장관님 혼자뿐만 아니라 총리님과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각 부처의 그 자산에 유희지가 있을 겁니다. 유희지를 전체적으로 서울·수도권에 있는 땅들을 활용·분석을 하시고.

특히 안규백 장관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국방부가 서울·수도권에 국직부대 그리고 기관으로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수도권에 지금 현재 76%가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군 복지와 관련된 복지 및 재정관리 그다음에 역사연구, 출판·홍보, 사법 지원, 정보통신 이렇게 현장 작전이 아닌 행정과 지원,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발전, 3대 메가시티 이렇게 하면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이 굉장히 큰, 우리 청년들의 삶에 굉장히 큰 문제지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부처에 있는 모든 땅들, 유희부지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예를 들면 행정이나 복지나 기타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방 이전을 통해서 서울·수도권이 아닌, 예를 들면 KIDA 같은 경우도,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이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정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한

테 꿈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산과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전부 살펴 주시고, 지금 제가 국토부장관님과 국방부장관님한테 주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총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공급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들 다 포함해서 리스트업하고 공급에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특히 국방과 관련된, 아까 군사작전과 관련된 이외에 교육과 연구 이런 기타 내용들을 직접 총리님께서 살펴서서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 이전을 하면서 공급 주택을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힘드실 텐데요.

오늘 오후 회의는 김남국 위원님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안산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학창시절에 진짜 실력은 예습보다 복습이라고 해서 사실 미래대응기금 질의 준비를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기획예산처장관님께 두 가지 질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의 압박 등 미래대응자금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이 깊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설계했는지 여러 고뇌와 설계에 대한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평가받을 거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결정될 텐데요.

마침 천재일우의 기회, 우리에게 반도체 초호황 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이걸 단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다 빚 갚는 데만 쓰겠습니까? 그동안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구조가 우리 재정정책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분야를 촘촘히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를 대비한 그런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임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남국 위원** 장관님의 그 힘 있는 목소리에서 고심과 고뇌 그리고 결단의 의지가 결

연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반회계 항목 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총 다섯 가지의 계정이 마련됩니다. 그중에 총괄계정은 주로 적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정 형편이 악화되었을 때 거기가 중앙이건 지방 정부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또 적립금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해서 국채상에 저희가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 축이라면 나머지 4개의 계정이 소위 사업비를 지출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현재의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가령 복지, 국방, 행정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네 가지의 분야는 지금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제로섬 삭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변동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에 재투자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과 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난 20년 동안 10% 이상 급등한 게 다섯 번, 전년 대비 감소한 게 여섯 번입니다. 이게 불안정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간 10% 이상 급등한 게 열 번 그리고 전년 대비 감소한 게 여섯 번입니다.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불안정성을 제대로 해소하자는 취지가 당연히 담겨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지방교부금도 결코 줄어들지 않겠다, 만약에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보충해 주겠다고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1인당 교부금이 연평균 8.5%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까지는 10.1%까지 1인당 교부금, 초중고·유치원에게 가는 비용을 저희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또 채워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교육·인재 계정을 저희가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부세도 지방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서, 교부세는 또 교부세대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그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계정을 지방 계정으로 두고 계속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김남국 위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더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필요성을 더 적극 설명하면서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보다 소상히 설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민생안정과 국토교통 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쓰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김남국 위원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TX-C 노선과 신안산선은 경기 남부권, 경기 북부권의 많은 국민들, 도민들이 서울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금리와 최근 들어 원자재 상승,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사실 지연되고 착공 자체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먼저 GTX-C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보니까 지난 2024년 1월 착공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이게 멈춰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착공한다, 착공한다, 착공한다 이렇게 보도만 나오고 실제 착공을 뜨는 첫 삽은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우리 정부에서 최근에 노력을 해서 여러 공사비 증액 그리고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여러 문제 관련된 중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공사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이제 사업 정상화 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컨소시엄과 금융 대주단 간의 PF 금융약정 체결 그리고 최종 시공계약을 꼼꼼하게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8, 9월에 예정된 대주단과의 금융약정 협의와 그리고 시공계약까지 체결을 꼼꼼하게 챙겨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2년 6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GTX-C 사업 반드시 연내에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착공의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먼저 GTX-C 노선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너무 급등한 상황에서 시공업자와 시행사 간의 이견이 상당히 시간을 끌게 되었고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거쳐서 2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8월 25일 날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 시공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PF 약정을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현재 중요한 결정이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위원회 8월 25일 통과하고 또 PF 약정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계를 내서 그동안 길어진, 늦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장관님의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에 안심이 되고요.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다음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본선 구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전체 공정률이 72.6%에 도달해 있고 주요 도심 터널 굴착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통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 이후에 설

계변경 및 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공기 연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공기 연장과 관련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또 동시에 사업 지연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동차 제작사 변경과 그리고 차량 사양 및 납기 관리입니다. 현행 실시계획 사양 준수 및 안전성 점검, 검증 과정에서 납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도공단과 함께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토목공사 완료를 넘어서 터널 복구, 차량 적기 반입 그리고 종합 시험 운행까지 전 과정을 국토부장관님께서 직접 좀 챙기시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철도망 수요가 넘쳐 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얼마나 고심하고 계실지 또 실무진들도 얼마나 고심할지 충분히 눈에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을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신안산선 종점인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 바로 인근 사동과 해양동에 7600세대 자이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한양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정거장의 연장이 국가첨단산업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향후 5만 명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 잘 수용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박홍근 기획처장관님하고도 협의를 정말 잘해서 가능한 대중교통, 철도교통이 정말 국민들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 그리고 신안산선 연장…… 되지 않도록 조기 개통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개별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은 망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으로서 총량, 신규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저희가 의견을 주도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랑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도로보다는 철도가 향후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고 또 실제 수요가 있음을 명심해서 적정 수요를 저희가 총량으로 잘 결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나와 계시나요?

장관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어려운 통상 여건 속에서 지난해에 큰 성과를 내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출 그리고 수출 활력 회복과 그다음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출범 이후에 국가 외자 유치를 견인해 온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자부가 과거 단순한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중심으로 분양한 것에 그치는 것을 벗어나서 첨단산업 그리고 R&D 중심의 핵심 성장 거점, 국가 거점 산단으로 정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그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년간 경제자유구역이 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초기에 지원했던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은 줄어들고 또 그에 반해서 경제자유구역은 9개, 10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비롯해서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할 만한 메리트, 유인할 요인들을 사실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방정부, 안산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유인책들이 많이 부족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이 과거의 어떤 부동산 이런 톤이 아니라 새로운 단지로 변화돼야 된다는 데 저희들도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에서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과거에 정부가 국가산단을 살리겠다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기업들이 부동산, 국가산단 공장 부지의 땅값만 올리고 오히려 그 부지를 팔고 나가는 그런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새롭게 지정되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R&D 등등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총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김남국 위원**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고도 높은 월세와 치솟는 생활비 때문에 목돈 만

들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도 청년도약계좌에 이어서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이라는 장기 납입의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서 3년 만기로 설계를 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시행계획에서도 올해 청년미래적금 예산으로 744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청년들의 수요와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초 모집에 234만 3000명이 신청했고 138만 5000명이 최종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니까 더 적극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몇 명이 통장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계좌를 유지해서 평범한 청년들이 목돈 마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나라는 것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청년도약계좌에서 월 납입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39.4%고요, 반대로 최대 한도인 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청년의 중도해지율은 9.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납입액별 중도해지율이 무려 40배 격차에 달한다는 겁니다.

매달 7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청년들은 0.9% 해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10만 원도 내기 어려운, 정말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은 40% 가까이 통장을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 여력이 적은 청년일수록 오히려 청년정책에서 먼저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있을지, 고민이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이 부분은 지금 주신 데이터를 제가 사실 처음 본 부분이어서요, 지금 지적 주신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지속 가능하고 돈이 적을수록 사실 우리가 의도했던 자산을 형성하는 그 목적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위원 맞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이 자료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중도해지를 한 이유를 살펴보니깐요 실업, 소득 감소가 39% 그리고 긴급자금 필요가 33%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청년정책의 혜택이 절실한 청년일수록 월 납입 여력도 적고 그리고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먼저 이런 계좌를 해지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별로도 살펴보니깐요 19세에서 3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33.8%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자산형성사업 참여 경험은 정규직이 22%인 반면에 오히려 임시직·일용직은 18%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2%로 고용 형태에 따른 참여 격차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와 중도해지자를 소득 구간과 고용 형태별로 분석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좀 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그런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면밀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적금이라는 형태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구조이기는 하고, 그런데 최근의 청년들은 월급의 형태가 아니라 비정기적 수입이 들어오기도 하고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들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전달 주시면 관련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적금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성실하게 저축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려 7446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정부의 큰 예산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두텁게 더 적극적으로 소외된 지역 없이, 소외된 청년 없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감사합니다.

1분 시간이 남았는데요, 1분 남은 시간은 추가질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질의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장시간 국무총리님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짬짬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먼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된 데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국가기밀을 알고 계시지요? 접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듣게 됐습니다.

○**서지영 위원** 장관 때하고 총리 때 국가기밀을 접하는 범위와 깊이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서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전임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여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여당에서도 중진 의원이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치적 안목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김민석—이제 민주당 대표시지요—대표께서 전당대회 때 민주당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천지·통일교 특검이 출발하지 못한 것도 마치 전임 대표의 탓인 듯이 얘기를 하셨지요. 그거야 정당 내부의 일이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비밀연합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다며 관련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정교유착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차관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7월 19일 날 SNS를 통해서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4일 합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요.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합수본은 이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정교유착 관련된 혐의들을 수사해 왔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보도에서는 7월 24일 날 민주당도 집단 가입 정황이 있다며 합수본 수사 착수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4일간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졌지요.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합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월 달에 민주당에도 그런 신천지 개입 정황이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7월 달에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와 같은 보도가 집중돼서 나가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요. 합수본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이 경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와 같은 보도에 집중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3월 달에 신천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에 국민의힘 가입하라고 했는데 신도들이 거부감을 보이며 민주당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본발로 민주당 당원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흘러나온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민석 후보가 7월 19일 날 SNS에 게재하자마자 7월 24일부터 수사 내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4개월 동안 왜 합수본이 뭉개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별로 의문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미 통일교 특검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4개월 전에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통일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9월 달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전재수 지금 시장이지요—수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데도 12월 달에 윤영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 부랴부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렸지요. 그것을 합수본으로 넘기고 나서 합수본에서는 또다시 수수 금액을 낮춰서 공소시효를 만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당시에 부산시장 후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후보 예정자였지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했던 거지요. 4개월 동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

다. 특검이 공개 버렸습니다. 그다음에는 금품 수수 액수를 낮췄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끝난 사실이니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사가 끝난 거니까요.

중간에 특검에서 얘기했던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시계 하나는 왜 없어졌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합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당시에 수수가 거론된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합수본에서 넘겼다고 하는 구체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서지영 위원** 금품 수수 액수가 왜 낮아졌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수사근거가 무엇이었는데를 묻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을까, 왜 불가리 시계는 없어졌을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당시에 사건을 처분하면서 합수본에서 처분의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서지영 위원**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을 했었지요. 그리고 왜 2000만 원이 없어졌는지, 불가리 시계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대충 해서 넘긴 걸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합수본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서지영 위원** 아니면 윤영호 진술이 거짓일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을 텐데……

○**서지영 위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당히 합수본에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합수본은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했었고 예들려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보도에서는 까르띠에 시계를 수리한 사람이 지인이다라는 것까지 밝히고 그것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경로로 그 지인에게 까르띠에 시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수본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합수본이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수본이기에 이번에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얼마나 편파적인지 한번 볼까요?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시도를 7회나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왜 다릅니까? 차관님,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무려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중앙당, 중앙당,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그리고 DB 관련 업체까지, 민간업체까지 압수수색 했었지요.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명부 대조하자고 하더라고요, 특검 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도. 2022년도에 이낙연 대선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김어준 씨가 제기했었습니다. 그

려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물표를 받았다고 그러면 선거인단 명부와 신천지 교도, 종교인들 명단을 비교하면 됩니다. 특검이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 안 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종교단체의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 그 혐의, 법률사실의 내용, 경위 등과 관련해서 모두 다 평면으로 같이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지영 위원** 평면으로 같이 놓고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서지영 위원** 거의 똑같은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을 대하는 수사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범죄사실과 증거 관계에 따라서 합당한 수사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수사하러 오는 특검은 보니까 참 대충 하던데요, 차관님.

차관님, 하나 묻겠습니다.

김민석 지금 당대표께서 당시에 본인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수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합수본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수본은 뭐 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조사받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증거 있는 사람,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대중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검사나 경찰들은 불러서 조사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합수본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차관님은 판단할 수 없습니까? 차관님 법조인 아닙니까? 검사 아니셨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얘기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얘기한 사람,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못 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합수본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차관님은 판단을 하시기 어려우신가 봅니다.

이 합수본의 수사는 종료가 됐습니까,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를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있다고 했으면 김민석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는 거겠지요. 증거가 있다면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고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대한민국 합수본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합수본은 없어지겠지요. 대통령께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으니까 없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경찰 몫이겠지요.

여기 경찰청장 직무대리님 나와 계시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서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발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먼저 합수본의 수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재수 시장 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은 의혹만 있는데 혐의는 없다라고 본인도 주장했는데요.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무실 직원들, 의원회관 직원들은 엄청난 선고를 받았지요, 지금. 어떻게 증거가…… 혐의는 없는데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증거인멸로 거의 실형을 구형받았지요.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더욱더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제가 문체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서지영 위원 국토부장관님은 아니시지만 상식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같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지영 위원 조금 아니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재건축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다릅니다.

○서지영 위원 명확하게 다르지요.

전재수 시장이 장관 재임 시절에 문체부장관님을 만나서 특별하게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사직야구장 부분은 문체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이야기가 됐었고 전재수 장관님……

○서지영 위원 장관 시절에 국무회의에서나 아니면 장관님께 별도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지영 위원 장관님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해수부장관인데 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같은 국무위원들끼리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글썽요, 그 당시에는 여러 말들을 많이 나눌 때라서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다 없다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작년에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중투심을 7월 3일 날 통과했습니다. 여기 행안부장관 계시지요? 행안부 중투심을 7월 3일 날 통과하고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월 31일 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산시에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었지요, 40년 만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당시에 전재수 장관께서 본인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장관님께 굉장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하셨습니다.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마치 본인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여를 해 주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동시에 해수부장관 재임 시절에, 나중에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본인이 이랬습니다. TV 토론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돔 야구장을 만들겠다. 제가 해수부장관 시절에 부산을 위해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해수부장관으로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해수부 주무부처 다음에 항만공사하고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재임기간은 불과 한 5개월 10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임을 하는 중에 문체부장관에게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또 동시에 돔 야구장에 대해서, 부산에 돔 야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 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전임 장관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해수부에서, 주무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항만공사와도 협의를 했다면 해수부의 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검토했던 보고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하드 디스크에 남아 있겠지요. 이것까지 증거 인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 내에서 어떤 검토보고를 했었는지 수요일까지 저희 의원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임 장관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처에서 검토했던 내용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자료와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앤다면 그거야말로 국가기록물을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확인하고 검토된 내용들 저희 의원실로 꼭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문서 파일에 언제 며칠..... 문서 파일 다 있지 않습니까? 문서 기록이 있으니까 언제, 며칠에 작성된 문서들인지도 함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취임하기 전의 일이니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선이나 하였고 그 나름대로 부산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장관 5개월 재임하는 동안 동시에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될 수 있는 사업들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했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중인격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부산시를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통과될 때는

‘나의 공이었다’ 얘기했다가 부산시장 선거 공약으로는 ‘돛 야구장 하겠다, 바다 야구장 하겠다’ 주장하면서 사직야구장을 이제 생활체육시설로 하겠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 299억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보가 됐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전혀 결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자기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돕고 부탁했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런 분이 제가 사랑하는 부산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문체부가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추진해 왔던 것을 바로 여러분의 정부에서 여러분의 행정안전부와 여러분의 문체부가 약속하고 공모사업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인 나와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지영 위원 기초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선거 과정에서 문체부장관님은 전재수 당시의 장관으로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흔재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 돛 야구장에 대해서 본인이 해수부장관 시절에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는데 그 자료는 해수부에서 받아 보면 될 것입니다. 해수부에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재수 시장은 허위사실을 부산시민들에게 유포한 것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합수본이나 민중기 특검처럼 공소시효 소멸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중앙선관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방금 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거짓으로 자신의 성과를 포장했다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요.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옥미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될 지켜보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보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옥미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문체부장관께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본인이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협조했는지. 그다음 해수부장관 시절에 돛 야구장, 바다가 보이는 돛 야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해수부의 자료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요일까지 해수부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또 누가 전재수 당시의 장관에게 보고했는지까지도 저에게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질의는 이후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재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만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 원주갑의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원주시갑의 박정하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기다려서 오히려 준비한 질의가 머릿속에서 혼돈스럽습니다.

우선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홍 수석님만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홍 수석님께 좀 여쭙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몇몇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익표 수석님, 청와대 관저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위원님이 특활비도 그렇고 관저 공사도 그렇고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간에 서는 관저 이전의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확인만, 사실관계만 우선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로 이전해서 집무를 시작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하고, 대통령 부부께서는 6월 5일부터 한남동 관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 11월 6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 관저에 대해서 여쭙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까 지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 취지상으로만 보면 진짜 이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1월 5일 날 다시 공사, 리모델링 이런 것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벽 두께가 1m 정도 되고 철판도 있고 지금 공사가 난항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성기홍 홍보수석께서 지난 7월 29일 날 ‘곧 이사하실 예정이다. 그런데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중에는 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홍 수석님도 올봄에 부임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올 1월에……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그전의 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상반기에 청와대에 입주한다더니 이삿날 못 잡는 이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글쎄요, 그 기사는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청와대 내에 대략의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대략 혹시 뭐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경호시설이고 대통령 관저이기 때문에 일이나 대략의 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 안에 이전은 확실하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호시설과 관련해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기사 못 보셨다는데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 청와대 이전공사비가 한 200여억 원인데 이걸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관저 이전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저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한 게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혹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석님께서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말씀 주실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시설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의 유무 자체를, 경호 내지는 보안 등과 관련해서 유무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다가 아니라 여기 기사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는 아니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일체 청와대 관저라든지 청와대 내부 시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하 위원** 저도 청와대 구조 조금 아는데 그 관저가 그냥 단층 건물이잖아요. 단층 건물인데, 이제 여쭙게요.

좀 전에 경호 등등 포함해서 시설 보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건물 외에 추가적으로 골조를 통한 무슨 건물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박정하 위원 또 하나 여쭙게요. 이것은 그냥 재미 삼아 들어 주세요.

작년에 제가 문체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체위에서 활동했는데, 문화부장관님도 기억하실 거고 문화재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관저 얘기를 여쭙니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 하시는 유홍준 관장님께서 ‘굉장히 음습한 자리가 돼 가지고 관저로 권하기 좋지 않고 삼청동 뒤에 있는 안가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혹시 수석님께서서는 1월 이후 부임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글썽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과거부터 풍수지리와 관련돼서 이런 저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관저에 계획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냥, 오히려 수석님께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틀렸다, 없었다 이것을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이런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기존 관저에 계획대로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병립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느 쪽이 우위로 해서 관리를 하나요? 병립적으로 구성돼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글썽요, 자세하게 청와대 내부의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서실……

○박정하 위원 그것은 말씀 주셔도 될 텐데.

저걸 여쭙려고 해요.

지금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어디인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대통령비서실입니다.

○박정하 위원 비서실이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박정하 위원 비서실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주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삿날 못 잡는 이 대통령’이라는 이 기사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비서실 내에서는 별도로 이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저희들이 언론 대응을 하지만 사실관계가 틀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고요. 아마 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이 있고 예상되는 이전 시기가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날짜도 못 잡고 있다,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전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 상황과 관련 말고, 주요 참모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기거하는 관저 이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이전했을 때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지, 혹시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등등을 비서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주요 수석님들이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자리도 없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관련 비서진들이나 수석이 참여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주 업무가 기능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내의 관련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등과 함께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주요 수석님들은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못 주시겠다 이런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단순히 늦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개방됐지 않습니까, 지난 시기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내부 구조도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 관저는 고도의 경호와 보안이 유지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 구조 그리고 기존에 전임 대통령이 있었을 때의 보안·경호 수준 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본관의 규모와 관저의 규모가 다른데 공사 시작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나요, 아니면 같이 진행됐는데 관저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의 원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기와 관련된 부분.

○**박정하 위원** 공사 시기 정도는 말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청와대 이전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업체가 없을 리는 없고 병립해서 같이 공사를 시작했으면 관저 공사가 훨씬 일찍 끝났을 텐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본관과 그다음에 여민1·2관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박정하 위원** 거기는 워낙 노후돼 있고, 그런데 거기 공사하고 본관 공사하고 관저 공사는 또 성격이 틀릴 테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런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게요.

관저 공사 관련해서 그 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업체, 방식, 계약금액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안상 문제라고 말씀 못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어떻게 되고 공사 시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경호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저도 사실 경호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정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호와 이게 엄청나게 관련이 있거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청와대는 무조건적으로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자료를 그냥 경호 명분으로 다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후에 관련 예산, 아마 올해 쓴, 소요한 예산은 내년도 결산 과정에서 다시 투명하게 집행된 내역을 국회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호설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공사자재라든지 또는 자재의 필요한 어떤 스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경호 담당 경호처와 심의·논의해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관련된 업무가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해서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사 시기 관련한 것들은 의원실에 말씀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한남동 관저에 자주 가지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자주는 아니고 가끔……

○**박정하 위원** 가끔 가지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스크린골프장, 다다미방, 히노키탕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 역시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지만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는 좀 곤란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게 무슨 보안이 어떻게 관련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현재 대통령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완전히 이주가 대통령……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것만 여쭙게요. 지금 제가 거명했던 스크린골프장, 다다미방, 히노키탕이 폐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 중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시설의 존재 유무를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사진도 아마 공개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런데 어쨌든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고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시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있다 하더라도.

○박정하 위원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박정하 위원 혹시 청와대 신문고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박정하 위원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출퇴근하면 불가피 차량 대형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교통 통제해서 불편하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글썽요, 제가 신문고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이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상의 경로에서 불필요한 교통 통제는 최소화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문제는 청와대로 판저 이전할 경우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내용 있으면 설명을 좀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박정하 위원 용산공원 관련해서 여쭙게요.

김윤덕 장관님, 아까 답변에서도 오세훈 시장 추후에 만날 거고 이런 계획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정하 위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용산공원 주거지화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협의와 상관없이요 용산공원 주거지화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산공원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된 것 중에서 훼손된……

○박정하 위원 어쨌든, 제가 수정할게요. 훼손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훼손된 부분 이면 거기에 바로 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장교 숙소는 원래 LH에서 임대해서 숙소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쓰고 있던 곳도 있고요.

○박정하 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남산을 쳐다본 전경입니다. 거기서 장관님께서도 훼손된 부분 일부라고 하는데 몇 세대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지금……

○박정하 위원 저게, 승효상 건축가시지요? 저분이 국중박을 설계하면서 열린 마당이라고 해서 다 포함해 가지고 설계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저기만 피하면 괜찮은 겁니까?

○박정하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 뷰만 피하면 괜찮은……

○박정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듯이……

○박정하 위원 제가 그래서 대강 구체적으로 몇 세대 정도 생각하시는지 말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일 좋은 부분을 놓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대강 몇 세대인지 추정 안 해 보셨구나.

총리님께 여쭙게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박정하 위원 총리님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용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산공원 부지 관련해서 확정적으로 정부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다만 이 공간이 잘 아시는 것처럼 91만 평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림픽공원의 2배도 넘고 여의도공원보다도 넓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또 아까 국토부장관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박정하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 것은 없었고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토부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논의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박정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게요.

용산공원 특별법 제7조, 8조에 보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 위원장을 총리가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리님께서도 좀 전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다고 했으면 이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한 번도 진행 안 하셨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총리 된 이후로는 아직……

○박정하 위원 없으셨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박정하 위원 총리 된 이후에 지금 용산공원의 주택공급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 안 하고 지금 청와대하고 국토부장관께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박정하 위원** 그래도 용산공원을 어떻게 공원화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의지를 표명해서 총리 주재로 격상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공원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위원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걱정인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쪽 가면 된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이게 위원회에 안전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박정하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책화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

○**국무총리 한성숙** 그러니까 국토부장관님……

○**박정하 위원** 우선 정해지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위원회를 거수기화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께서도……

○**박정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급하게 여러 번 작년부터 공급대책 내기 하다가 대출 절벽 만들고 그래도 부동산이 안 잡히니까 갑자기 줄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질의시간이 다 됐네요.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잠깐 제가 마무리할게요.

잘못하면 이것 줄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총리도 모르는 일이 그냥 진행이 된 총리 패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안들이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올라가려면 정리된 안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용산공원에 관련된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서울시장의 생각과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용산공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미 주택지로 쓰거나 여러…… 미군 반환 부지 아닙니까? 여러 이슈들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주택의 용도로, 특히 청년들이 좀 잘 쓸 수 있는 용도로 재개발해서 굉장히 좋은 장소에 대한 용도를 다양하게 가자라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방안을 정리하고 구체화되면 이게 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상황은 정리된 바도 없는데 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단계는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위원회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그런 말씀 주신 부분들 좀 보고 위원회의 사안인지랑 내용들을 챙겨서 챙길 부분들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장님, 국토부장관입니다.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부연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지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광재**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토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현재 서울시 내의 주택공급이 매우 절박한 요구로 되어 있다.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전월세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면 주택을 빠르고 또 많이 공급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곳들을 검토하고 있고 주택공급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사라든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려고요.

용산공원도 일부 훼손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산공원을 재구조화한다면 훼손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또 특히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이런 원칙하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그리고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단위들과 또 국민적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이제 그걸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울시장과 의논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을 짓거나 또 일부 의견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남산뷰와 같은 정말 서울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녹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을 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서울시민들이 아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용산공원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공존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산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들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춘천·철원·화천·양구, 이 네 곳에 댐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소양댐, 평화의댐.

화천댐은 82년 댐입니다. 그다음에 춘천댐은 61년, 의암댐은 59년, 소양강댐은 53년 댐입니다. 평화의댐은 37년 댐입니다.

이 오랜 기간은, 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그 오랜 기간만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환경 규제지역으로서 이중 삼중의 그런 규제를 받고 살아온 80년의 세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목적댐들이지요. 서울·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80년간 규제를 받았던 이 상수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톤당 170원씩 걷어 가지고 수계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하면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목적) 조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이 보면 연 한 5500억 정도 이렇게 걷힙니다, 톤당 170원씩 걷혀서요. 그래서 한 99년부터 이렇게 보면 강원도는 기금 지출이 한 2조 가까이 됐고요. 전체 한 10조 정도 이상 걷혔는데 20%도 안 되는 그런 기금 지출이 있어 왔지요.

원래 수계기금은 강원도가 55% 부담…… 아니, 포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도가 한 22%, 경기도가 한 11% 그다음에 아마 서울이 5% 정도, 전체 기금에서 사실상 55%를 강원도가 써야 합니다,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만 해도 경기도가 2034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강원도는 1264억 원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봐 주시면, 여기에 전체 기금의 20%를 토지 매수에 쓰고 있는데요. 이 토지 매수도 넓게 땅을, 수질관리 개선지역 땅을 넓게 사 가지고 땅의 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땅을 그냥 쪼개 가지고 사 가지고 20%를 쓰고 있어요. 그 땅 산 거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저런 데 전체 기금의 20%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차원 또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친환경사업을 지원하는데 저렇게 줄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 문제를 이슈화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렸습니다, 89억 원에서 161억 원으로. 그런데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다음.

더 기가 찬 얘기가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전국에서 수돗물값을 제일 비싸게 내고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m³당 1104원, 서울은 771원, 경기도는 551원, 전국 평균이 801원이지요. 국민 일인당 1일 한 305ℓ 정도, 0.3t 정도 사용합니다. 저게 1년치면 꽤 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80년간 규제를 받으면서 아무런…… 폐수 나오는 공장 하나를 유치하지 못해요, 저 규제 때문에. 그러니 강원도 인구가 300만에서 150만으로 줄었지요. 수돗물은 또 제일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은 급수 인구 그다음에 관로 길이, 시설 규모, 여러 가지 취수·정수 여건 이런 것들을 다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정하는데, 지금 총리님이 지방우대지수 개발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먼 거리 우대를 하는 걸로. 상수원으로 보면 우리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이 가장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까, 또 상수원이고.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수돗물 우대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비싸게 먹고 있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면 첫 번째로는 톤당 170원씩 받는 물이용부담금이 1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20%, 30%씩 올렸어요. 단 5원만 올려도 연 900억 원이 더 건칩니다. 그중에서 500억 원을 우리 강원도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년째 경기도·서울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5원, 1원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의사결정 구조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수계관리위원회 9명에서 다 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고요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공사 사장, 수력원자력 사장 이렇게 들어가고,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부단체장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단체 부단체장이 들어가지만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은 아예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대표도 그냥 자문위원으로 아무런 의사결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몇백 개 되는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 일일이 환경부에게 그거를 다 기획예산처 가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것처럼 다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거기 심사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받아야 돼요. 춘천시는 내년에 아무런 사업도 지금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총리님께서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서 이걸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계기금 아까 목적조항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 기금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 햇빛소득마을 하는 데 이 기금을 또 쓰게끔 돼 있어요. 수자원 관리하고 햇빛태양광 마을을 만드는데 그거는 정부 재정투자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지요. 왜 80년간 규제를 받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몫을 그 기금에서 빼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건, 한 건 환경부 직원들한테 읍소해 가지고 투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 저는 포괄보조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만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장관께서 답변드리는데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허영 위원** 예, 김성환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허영 위원님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시작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됐습니다만 수계기금의 현재의 배분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도 우리 기후부 식구들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수계기금의 성격상 상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위 직접적 보상, 하류 지역에서 물을 먹는 분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상류지역의 물을 보전하기 위한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위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한 보상체계를 지금과 같이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계기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하류 지역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위 수계기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배분의 방식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의 방향을 좀 바꾸자는 거고요.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도 기왕에, 햇빛소득마을은 소위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 드리는데 주민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 부담분을 수계기금으로 해 드려서 오히려 부담을 더 줄여 주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15%에 대한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아예 줄여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돗물값이 서울·수도권하고 강원도민하고 더블 차이가 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배분 기준이 달라서……

○**허영 위원** 15년간 물가상승이 얼마나 됐는데 3원 올려도 그게 서울·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3원, 5원 올리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저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돗물값이 더블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국 위원께서 청년미래적금 문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다 떠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정책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장기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구직 단념 청년이라든지 고립·은둔 청년이라든지 이분들은 아예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층들이거든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 70만 원, 월 50만 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이 구조를 조금 더 바꿔야 되고 아예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까지 꼼꼼하게 설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취업·근속 연계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청년들이 각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떤 맞춤형 정책 지원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년 1명이 통합 창구에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자산, 취업 상태를 토대로 해 가지고 미래적금이나 내일저축계좌 또 취업·자활 지원사업 같은 데 자신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 창구화해서 좀 쉽게 청년들이 이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부처 간 통합 논의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정말 공감하고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청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도 규모가 꽤 된다고 하지만 사실 청년들에게 와

닿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 형성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 주신 여러 계좌들도 있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창구로 제공하자라는 건 내부, 지금 정부 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속도 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청년 장기근속 일자리를 유지하면 기업과 청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장기근속 하면서 목돈 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한 98%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청년들 전체 대상의 예산 규모가 한 20조 원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압축해 가지고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청년 정책을 하면 얼마든지 비용 부담 없이 그런 사업들도, 그러니까 근속과 일자리하고 목돈 마련을 플러스해 가지고 하는 정책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환경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보이고 체감 높은 정책들로 해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또 총리님도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강원 지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거를 보시면 강원도민의 입원 의료 이용 가운데 31%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종합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취약지 비율이 66.7%, 전국 평균에 비하면 거의 2.2배 정도 의료 취약지가 많은 편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입니다. 이거는, 강원도가 전체 서울 면적의 28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하고 강릉아산병원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을 커버하고 있고 원주세브란스병원은 강원 남부를 커버하고 그래서 춘천을 비롯한 강원 북부권은 아예 상급종합병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영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를 계산하는 계산 산식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거 그 산식대로 적용하면 강원도는 상급종합병원, 강대병원 같은 국립대병원은 아예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산식을 제대로 좀 수정·보완해 주셔서…… 강원도, 서울의 28배가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거리 때문에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강원도 현실을 기반해서 강대병원 같은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특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치료 역량에 대한 평가와 병상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산정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국립대병원이

8월 20일부터 복지부로 이관돼서 강원대병원 같은 국립대병원은 또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예, 참 많이 억울한 삶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 마지막 질문을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요.

교육부가 올해 글로벌랩 거점형 과제를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15억 원씩 최대 9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대학교 연구교수님들이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척돼야 될 심사위원들이 서로 싸움 해 가지고 특정 연구과제를 민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런데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거쳐야 돼서, 선정돼야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이거 사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허영 위원** 제보 사항은 제가 장관실로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있는데요. 양구 용하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20년 전에 하던 방식은 15m 토성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철로를 깔고 마을을 반토막을 냈습니다. 거기가 가장 큰 평야 지역인데 평야를 반토막 냈습니다. 15m 토성을 355m를 쌓습니다. 20년 전 방식이에요. 이것을 교량화해 달라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국가권익위원회에 가지고 기관 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걸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대 3 구조로 국가가 7을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8%밖에 안 되는 양구군은 3을, 이렇게 합의를 봤던 그런 사업입니다.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 사업 잘 살펴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지사를 지낸 저로서도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강원도지사 할 때, 한강수계 기금 조사했을 때 강원도 단체장이 포함이 안 된 것을 그때 얘기해서 고쳤는데 김성환 장관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이광재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국민의힘의 배준영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제주서 또 다른 실종자 사체 발견 사흘 새 4명’ 이 뉴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방금 또 나온 뉴스인가요?

○배준영 위원 예.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방금 나온 건 못 봤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재명 정부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과 경찰의 일상적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엄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시스템 보완할 것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봐야 하는 건지를 정말 심각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전수조사를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아니요, 국조실과 어디서 할지도 다 정해서 공정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는데요. 공직기강은 총리실에서 챙기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총리실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실종사건 긴급 전수조사 다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지금 현재……

○배준영 위원 그리고 장기미제 실종사건도 재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이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개선하셔야 되고 허위 종결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하셔야 되고 가족에게 종결 사실을 의무 통보하는 제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배준영 위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신 부분들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민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영종에서 지난 7월 13일 날 저녁 때 심야까지 전기가 6시간 이상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불이 꺼져서 치안이라든지 민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는 배 타고 4시간 가는 건데요. 7월 31일, 8월 1일, 8월 4일, 8시간 해 가지고 세 번이나 불이 꺼졌습니다.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이십니까?

○배준영 위원 국무총리님이십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접니다. 죄송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것 아셔야 돼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배준영 위원 선진국이라는 것은 도시건 지방이건 시골이건 그래도 합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영종 같은 데는 지금 라인을 하나 더 깔고 또 지중선도 3.4km 해저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백령도 같은 데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후부장관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 여름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저 수치를 보시면 내년 8월 달 여름에는 이미 수치가 넘어서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꺼지게 생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빨리 조치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배준영 위원 국방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배준영 위원 거기에 해병 6여단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불 나가면 어떡합니까? 같이 좀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민생 문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경제권 관련해서 이제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1년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영종에서 응급으로 실려 나가고 그중에 300명 정도는 KTAS 1·2다 이렇게 제가 국토위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더니 김윤덕 장관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다섯 번째 운영 중입니다. 정은경 장관님께서도 와 계신데 지난 4월에 응해주셔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고 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라든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항공사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항공사도 그렇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결론 끝에 일단 공항공사에서는 국토부와 힘을 합쳐서 운영이랄지 설립에 관련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입장도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 2호에는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치 못한 지역과 분야에 대해 의료 공급, 감염병 대응, 재난환자 진료를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적용했을 때 종합병원을 공항권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인천시 등 지자체가 시설·장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제13조도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고 하는데 꼭 공공병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공항권 종합병원을 별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인천시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TF에 저희 복지부도 참여해서 설립 방안에 대한 걸림돌들이 뭔지와 타당성이나 방식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의료법상 설립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병상수 같은 그런 제도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공항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지방에서 공항 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산에서 인천공항 가려면 3시간 반 걸리고요 광주에서 가려고 그러면 3시간 정도 걸리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KTX가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2014년서부터 18년까지 운영했는데 그냥 끊어 버렸는데 전국에서 반발했는데 정부에서는 밀어붙인 이유가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2공항철도라는 게 제1차 국가철도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제3차·4차에는 안 들어갔는데 어천역하고 수원역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부산이나 광주나 강릉이나 이런 데서 한 방에 그냥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철도 5차 개발계획이 있지요, 장관님? 차관님 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기조실장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공항 간에 잘 연결이 안 되고 특히 인천공항 가려면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물론 공항과 공항 간에 비행기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철도로 연결하면 금방 더 편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5차 철도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X-D Y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 2023년도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정부질문이나 직접 현장에서 GTX-D Y노선에 대해서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윤덕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에 100만 명 이상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철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없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이 역시 5차 철도망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적극 검토하신다는 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기예처, 예산 당국,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볼 때 한 가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한 가지는 거의 확약이

했는데 비슷한 강도로 말씀하시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이것은 너무 많이 여쭙봐서 사실 또 여쭙보기 좀 죄송한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안 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이 계속 물으셔서 가지고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배준영 위원 머리가 아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그냥 안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이심전심으로 알아들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심전심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의 항만공사 네 군데를 지금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인천·부산·울산 그리고 여수광양, 그런데 이 네 군데 시민들 그리고 공사 자체 노조, 항운노조, 시민단체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네 군데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기능이 다 달라요. 컨테이너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대중국 항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20년 전에……

해수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해수부장관입니다.

○배준영 위원 해수부장관님, 20년 전에 항만공사 만든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다 반대했던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다른 이유인데……

○배준영 위원 다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있고 지방해양청, 인천해양수산청, 부산해양수산청이 있는데 뭐 하러 항만공사까지 더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으로 하느냐 이렇게 따졌더니 그때 해수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두고 지역의 포트 세일즈라든지 지역의 항만 발전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수산청이랑은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달라’. 그래 가지고 지역별 항만공사가 생긴 겁니다.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 합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유학도 다녀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뉴욕 뉴저지 포트 어소리티(Port Authority)라고 아시지요?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만도 하고 공항도 하고 다리도 하고 터널도 하고 월드트레이드센터도 해요. 지역에 맞는 공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갑자기 합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합쳐 버릴 거면요 그냥 해수부랑 합쳐 버리면 됩니다. 뭐 하러 이렇게 다 합쳐 버려 가지고 옥상옥을 또 만듭니까? 항만공사 다 합치고 그러면 항만공사가 각 지역을 위해서 포트 세일즈 할까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까요? 지역을 위한 개발사업 할까요?

아니, LH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각 지역에 포스트해서 역할하라고 다 보내고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역에서 역할하라고 다 보내면서 왜 있는 것은 다시 합쳐서 기능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이것은 합친다는 게 인천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같이 개발해서 같이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의미의 그런 의미지요. 이게 인천에 있는 것 합친다 해서 부산으로 옮기고 부산에 있는 것을 인천으로 옮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다시, 잠깐만요.

해수부장관님, 전국에 있는 항만공사 합치는 것 찬성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정부 전체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반대하신다잖아요.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지난 7월 20일에는 4개 지역 300여 시민·항만 단체가 국회에서 통합 중단을 요구했고 여수·광양 지방의회도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8월에는 부산·인천·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으로 통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통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가 묻겠는데 서검도에 얼마 전에 관정에서 먹는 지하수인데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량에 좀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저와 우리 군수와 또 기후환경부하고 여러 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산 우라늄공장의 핵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이 괴담은 이미 지난해 7월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근 해역의 중심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게 맞지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부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맞지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매월마다, 올해 들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7월 6일 우라늄이 검출된 이후 8월 5일에는 시료를 검사해 그 결과를 20일 날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20일 날 그 발표한 것 보고받으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받았습니다.

○**배준영 위원** 우라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영 위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번에 서해바다의 우라늄 관련된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했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문제없습니다. 다 자연 상태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님, 핵 폐수 했다고 그러면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

겠지요. 일곱 군데의 정점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준영 위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좀 발표를 해 주세요. 발표를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오는 중간에도 전화를 받았습시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발표를 하지 왜 쉬쉬하냐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라고 그러면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알려 봐야 얼마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트라우마가 있어요. 후쿠시마 핵 폐수, 오염수 사건 때 어느 당에서 그랬지요. ‘제2의 태평양전쟁’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습 우력’ 이래 가지고 저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핵 오염수에 대해서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어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주란 말입니다.

그것 통일부에서 하시겠습니까, 해수부에서 하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후부에서 하시겠습니까?

총리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챙겨 가지고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보니까 세 가지 예타조사 개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타 대상을 상향하는데 500억에서 1000억으로 한다 그리고 R&D 사업 예타 제외한다 그리고 균형성장 평가항목 신설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상세한 추진 방향도 공개를 하셨고 그리고 균형성장 평가항목은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실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법안…… 그러니까 현재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린 것은 지금 상임위, 재정위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R&D 예타 폐지는 이미 그걸 저희가 폐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 지역성장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은요.

○**배준영 위원** 그런데 기존의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모든 것이 다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타가 시행되었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배준영 위원**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들어 봤습니다.

○**배준영 위원** 인천 옹진군의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오후 7시까지만 배가 운행되고 섬에 병원도 없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육지에 가기도

힘들고 중·고등학교도 육지로 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런 조건을 좀 제대로 적용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이 사업은 다행히 작년 2월에 예타 사업으로 대상이 선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지금 조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또 하나는 백령공항 예타 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배준영 위원** 백령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비행기가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예타를 새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예타 수치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행기 용량이 커졌다고 예타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울릉도나 백령도나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총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잘사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것은 도시건 시골이건 비슷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 사업의 경우는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좌석이 50석에서 80석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총사업비가 꽤 많이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늘어나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타재(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것도 현재 저희가 정책성 분석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또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병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경기 부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대통령입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지요? 이 문장의 주어는 대통령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이건태 위원 헌법 104조 2항을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헌법 104조 2항의 취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고 임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입니다.

동일한 규정 형식을 가진 헌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취지가 더욱 명확합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98조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장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수동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그건 아닙니다.

○이건태 위원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수동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역시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건태 위원 명백히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이건태 위원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한 사람을 기계적·수동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헌법 위반 주장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구체적인 해석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건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쪽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그건 행정부 내부의 제청권과 임명권의 문제고 104조 2항의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후보를 제청해 온 헌정의 관례는 국회 동의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헌정적 혼란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서 국회가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나는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실제로 국회가 임명동의를 했음에도 임명을 거부해 버리면 대통령과 국회의 신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단계에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승낙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헌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헌정의 관례는 그래서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헌법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기관의 신뢰를 위해서 지켜져야 할 합리적인 관례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건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건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보에게 연락해서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적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폐기된 방안이라고, 방금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명했지만 법정 절차로 추천된 후보들을 상대로 추천 절차를 재진행하려 한 것 자체가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실상 형해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장이신데 이분이 이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의 지위를 해제하고 다시 후보추천위원회를 밟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직권남용 성립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태 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흔들고 대통령과 사전협의는 건너뛰었다면 대법관 인선 절차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협의 및 승낙 없이 제청을 한 이유가 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해산시키려고 의도한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천을 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됩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 날 바로 해산이 됩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법사위에는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대법원장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앞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관철한다면 사법권은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그럴 우려가 있다고 방금 인정을 하셨는데요. 어느 조직보다 합리적으로 인사가 운영될 거라는 것은 대법원장의 옳은 행동을 기대하는, 대법원장의 선의를 믿는,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충분한 견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대법원장을 누가 견제를 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에서도 대법원장님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판사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판사님들의 이의제기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제가 볼 때는 25년 5월 1일 날, 대법원에 저희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보는 그날 또 최근에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법원을 매우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이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이런 제왕적 권한을 무슨 수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건의가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권의 독립은,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관의 독립에 인사권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법관의 독립에 인사권의 독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분리해서 법관의 독립이 대법원장 인사권으로부터 침해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논리적으로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대법원장님의 인사권은 그렇게 전횡되지……

○**이건태 위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이 발생한 게 바로 개개 재판장의 재판권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재판 간섭을 받은 사례 아닌가요? 이런 논리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변론 종결하고 9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그 대법원 25년 5월 1일 자 판결문 70쪽 19줄부터 76쪽 2줄까지 총 5쪽 5줄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이 재판의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문구를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심리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기재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장님, 이 판결문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봤습니다.

○**이건태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심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다른 대법관들의 심리권을 침해·훼손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태 위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열두 분의 전원합의체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아직 심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리를 더 해 주세요’ 하면 전원합의체 관행상, 대법관 소부의 관행상 심리를 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도 합의의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태 위원** 처장님이 대법관으로 소부를 구성해서 판결할 때 소부 네 분 중의 한 명이 ‘나는 아직 심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심리를 좀 더 해야겠다’고 할 때 재판장이 ‘안 됩니다. 오늘 종결합시다’라고 해서 변론 종결한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건태 위원** 결국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한 분의 대법관이 심리를 추가로 할 것을 요청하면 종결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는 5월 1일 날 9일 만에 선고하고 2일 만에 변론 종결한 것은 심리를 더 할 것을 요구하는 이흥구·오경미 두 분 재판관의 충분한 심리권을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년 9월 30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일선 법원에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른바 6:3:3 원칙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개별 재판부는 물론 6:3:3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사건에 따라서 처장님도 재판을 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6:3:3을 지킬 수 없는 사건의 특징이 있잖아요. 증인이 너무 많다든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6:3:3을 지키라고 지시 공문을 내려보내면 대개 재판장들은 이거 빨리 재판을 종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해야 할 재판을 이 지시 공문을 받고 신속하게 종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3:3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지시 공문은 개개 재판부의 재판권을 침해했다, 재판 간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령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건태 위원**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전권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대법원장이 ‘당신 재판부는 이 법령을 이렇게 해석해라’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이것이 재판 관여가 아니고 재판 간섭이 아니면 뭘니까? 대답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령을 준수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건태 위원** 법령을 준수하라는 외관을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재판한 것이 아닌데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부장판사들이 배석판사들한테 수없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재판의 공정은 실제적으로도 공정해야 하지만 재판의 외관도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 지금 25년 5월 1일 자 그 판결은 재판의 외관이 공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열 분의 대법관들은 왜 외관의 공정을 해쳤던 겁니까? 재판에 참여

하셨으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 재판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 중의 일부에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24년 9월 30일 재판간섭 지시, 25년 5월 1일 대법관의 심리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뭔가 그것이 수사든 재판이든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게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한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이건태 위원**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 특검은 추가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총리님, 잔여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이 권 특검의 제안대로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특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내란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행위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최고위 국가공무원은 내란이 발생하는 순간 헌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내란이 발생한 순간 최고위 국가공무원은 내란에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동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최고위 국가공무원에게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건태 위원** 더구나 12·3 내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자행됐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다면 권창영 특검은 심우정, 신용해, 김명수 등에게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취지의 잣대를 적용했고 이진관 재판장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잣대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면 이런 잣대로 엄밀하게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로 살펴볼 부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읍의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위원 총리님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이준석 위원 최근에 한미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여 준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1985년도에 일본의 자동차·전자 흑자 이런 것들이 워낙 길게 그리고 크게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엔화를 강제 절상시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 무역역조를 해소하고자 또는 좀 손봐 주려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때문에 만약에 중동에서 유가가 흔들리게 되면 그걸 또 교정하고자 때로는 무력의 수단에 의존하기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대미 흑자 얼마 정도 봤는지 금액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잘 모릅니다.

○이준석 위원 그때 일본이 연간 한 395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40조 이렇게 한국 환율 기준으로 봤을 테고 요즘 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조 정도 이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0조 원 정도 자동차랑 전자제품 팔아 가지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물론 미국의 정치권에서 압력이 있었겠지요,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환율을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올해에 대한민국이 대미무역에서 어느 정도 흑자 볼지 혹시 수치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잘,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통상부장관님,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한 500억 불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가면 1000억 불 안팎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현재 가치 환산해 보면 일본이 봤던 무역흑자 정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투자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사례에 비해 봤을 때 실제로 미국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통상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미 투자협정 관련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장관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일본은 이미 1호 투자

이런 것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도 협상을 하시느라 고생 중이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1차·2차·3차 투자대상이 발표된다고 조금씩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과 아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합리성, 양국의 이익이라는 관점하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지금 현재 논의 상황을 고려하면 9월 중에 대강의 내용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부총리님, 제가 지난번에 재경위에서 질문드릴 때 사실 예전에 하신 발언을 빗대 가지고 환율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 부분 질문드렸는데 지금은 환율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까? 가볍게 여쭙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당시는 제가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면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금년의 환율 사정 그다음에 또 저기에서 합의가 된다면 9월 말 정도까지는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투자 종용과 더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800조 원 정도, 소위 말하는 호남반도체 투자를 지금 우리는 국민들에게 확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최근의 호남반도체 800조 투자계획 발표와 그리고 미국 측의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2000억 불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것을 이행하겠다 이것을 미국 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1년에 하여튼 200억 불 한도 해서 10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지금 계시지요? 김윤덕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사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국토부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전국의 뉴스테이 단지들이 이제 분양전환 또는 매각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이게 사실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가지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지금? 8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주춤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HUG에서 대부분의 뉴스테이 단지의 과반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이 가진 의결권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사용할 것인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테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세입자들이 내는 보증금 그리고 당연히 HUG의 기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가 들어간 돈이 있겠지요.

그런데 HUG가 가진 지분이 절반 이상인데 여기서 의결권을 적절하게 또는 세입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디얼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갖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다른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관심받을 수 있겠지만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다음에 분양 전환이나 매각이나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곳곳에서 터져 나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매각을 결정하는 시점을 언제 결정하느냐. 최근에 부동산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분양 또는 매각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임대에 비해 가지고 뉴스테이는 굉장히 법적으로 지금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또 요청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태동한 정책인지와 관계없이 장관께서 주거안정이라는 그 네 글자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장관님, 사실 또 우리가 국가철도망 계속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4차에서 했던 노선 중에서 저희 분당선 노선이 있습니다. 분당선 오산 지선 연장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분당선 계획에 있어서 표정속도를 맞추지 못한 계획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반력을 해 가지고 예타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기획예산처와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다가 두 기관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 5차 철도계획망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국토부에도 약간의 오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광역철도 성립요건에서 그 논쟁이 있는지는 위원님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것은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 중간 과정에서 지연된 것을 지금 제가,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 당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또 잘 아시겠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 방금 전에 광역철도 인정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따랐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와 좀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국토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제가 신도시 국회의원이자 보니까 국토부장관께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요즘 역세권이나 이런 곳에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중에서 광역교통망이 잘 확충된 곳들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까 동탄역, GTX가 있는 그 공간 주변에 원래는 앵커기업,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있으면 직주를 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상업적 용도나 아니면 일자리용 용도로 만들어 놓은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용산공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처음에 주민들께 약속된 것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전용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한 설득 과정 또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산공원을 원안대로 명품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도 기억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지를 찾을 때 물론 기확립된 교통환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런 부지를 보시겠지만 국민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해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용산공원과 동탄역 인근 부지 이런 것들 검토할 때는 지역의 민관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 용산에 가도, 저희 동네에 가 봐도 계속 그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고 한테요, 좀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 혹시 어떤 분이 나와 계시지요? 차관 나와 계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안부차관이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차관님, 한번 이거 여쭙보겠는데요. 경찰 순환근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서요 순환인사제, 상피제 그다음에 내부비리수사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경찰의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행안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건 좋은 것인데, 제가 상피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순환근무제는 솔직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경기남부지역의 우리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어떤 직급부터 시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명확하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재 장윤기 사건 이후에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준석 위원** 먼저 답하시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거기서 공론화랑 속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찰청 차장님이 더 정확하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입니다.

순환인사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의 유착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순환인사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총경급은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고 또 경정급은 시도 단위에서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경찰서 간에는 경감급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 이런 방안을……

○**이준석 위원** 어디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직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경찰……

○**이준석 위원** 지금보다는 낮추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그 방안도 논의하고 또 현장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순환인사제를 하려면 관사라든지……

○**이준석 위원** 맞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위직급까지 많은 부분에 순환인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정도를 정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이준석 위원** 차장님,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순환보직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면 결국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관사 문제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당장 경기남부청 관할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산에 있는 경찰과 분당에 있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차이가 꽤 날 겁니다. 10억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집값으로. 그러면 관사가 다 마련되기 전까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개인에게 교통수단을 의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버스 타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게 개인에게 다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사 아니면 통근버스 주는 것 외에 답이 있습

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관사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안을 좀 마련하도록……

○**이준석 위원** 제가 그래서 이 현실성을 한번 짚어 보고 싶은 게요.

차관님, 이게 예산을 아무리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분당경찰서 거기도 경무관 서급일 텐데 한 100명, 200명 정도만 순환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아파트 집값이 얼마입니까?

총리님, 분당 집값 얼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비쌉니다.

○**이준석 위원** 여기 한 15억짜리 집만 잡아도 100채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관사를 지을 수는 없을 테고 아파트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차장님,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게요, 진짜 국민들이 이것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는 싶은 건데 순환보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인지가 1, 그리고 순환보직을 했을 때 예산 수반되는 걸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 청 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순환보직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순환보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준석 위원** 제가 굳이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선 경찰들에게 빨리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경기남부만 하더라도 아까 생활비 아니면 교통비 부담이 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급을 내리면 내릴수록 취학기 연령에 있는 자녀를 가진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생활의 터전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금액적 부담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빨리 해야지 일선의 혼란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최대한 점검해 가지고 저희가 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제 앞의 위원님들도 제주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텐데요. 한번 이것 여쭙고 싶습니다.

경찰서별로 인력 배치가 지금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있는 동탄경찰서 그쪽 관할이 60만 명 정도 되고 송파의 송파경찰서 관할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2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제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했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우리가 모든 경찰관을 풀어 가지고 제주 서부 관할을 다 수색한다고 했을 때 인당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인당, 1인이 다 흩어져서 수색한다고 했을 때 제주서부경찰서의 경찰관 1명이 실종자

찾으려고 그러면, 다 진짜 이것에만 투입했을 때 1.012km²를 혼자 수색해야 됩니다. 한 건 해결하기 위해서 1.012km²를요. 물론 접근할 수 없는 공간도 있고 하겠지만요. 1.012km²면요 국회 이 경내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을 사실 경찰이 수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제 앞의 동료 위원들께서 경찰 타박하고 수사권 때문에 이렇다 여러 말씀 하셨겠지만 이것 우리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대책 없이 누구 타박하는 형태로만 끝내게 되면 다 부담이 일선 경찰로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준석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셨겠지만 이게 인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개인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도 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고. 오늘 본청 감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접수부터 사건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서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총리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신나게 타박하고 쇼츠 뽑고 하는 것은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일선 경찰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경찰 업무 과중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물론 수사권 조정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총리님이 봤을 때는 실종자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주취자를 처리하는 게 우선일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주취자 먼저 처리하게 되겠지요.

○**이준석 위원** 그게 총리님 분석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은 주취자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취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주취자가 오히려 그 경찰관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치안력의 확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그러면 정부에서 선을 그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경찰력이 주취자 처리 같은 것에 지금 많이 낭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선에서 필요한 곳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한번 총체적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아까 오전에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사건들은 사건대로 좀 상황을 봐야 하고요.

○**이준석 위원** 이번에 잘못된 사람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리고 지금 시스템적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번에 저희가 찾게 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정말 좀 큰 의미의 업무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은 다시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이게 또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소비될까가 걱정인 거예요. 사실 검사가 지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

는 안 믿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수사력의 부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 이냐……

○국무총리 한성숙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국민들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지 않았 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고라는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고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총리님이 기업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피크 때와 피크 아 닐 때 이럴 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제가 된 관서 같은 경우에 는 제가 단순히 생각해도 피크 때랑 피크 아닐 때의 수요가 한 3배씩은 차이 날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점검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차관님, 과방위 나온 지 제가 좀 됐는데 이번에 독파모 모델 심 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용자 점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다 계상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 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모델 자체의 성능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다 계상됐다는 것보다는요 배점과 관련해서는 참여 기업들하고 사전에 다 합의하고 논의했던 사항이고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성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1차 이후의 논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하에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이광재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질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광주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질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곧 끝나 갈 것 같습니 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정준호 위원 박홍근 장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화면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2023년부터 그래프만 보더라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라는 내

용이 확인됩니다. 오른쪽 내용을 보면 40년대에는 0%대까지 전망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이런 안 좋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잠재성장률도 2025년도 1.85%에서 2027년 1.52%, 혹독한 경고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지금에 향후 2, 3년은 국가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광주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대도약 그리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 제조, 퍼지컬AI, 해남·세종 등 18GW가 넘는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초격차 전략입니다.

그런데 매년 단편적으로 편성되고 소진되는 단년도 세출예산 방식만으로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국가 프로젝트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및 첨단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를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운용해서 국가 성장동력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재정 구조의 대전환이 시급하고 그래서 지난주 8월 21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금의 지출 원칙과 관련해서 넥스트(NEXT)를 제시하셨고요. 중점 투자 분야인 미래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시겠다고 선언한 그 방향성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향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재원 조성 규모나 연도별 로드맵이 빠져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 현장 반발이나 재원 위축에 관련된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씩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을 고려하면 100조 원을 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전망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하면 최종적인 규모를 국민들께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규모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추가세수가 한 60조 정도 이상으로 지금 파악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한 20조 원 정도 잡힌다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해서 100조가 넘는다는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전남·광주 반도체 팹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성패

는 전력 문제라든지 용수 문제라든지 대규모 인프라의 적기 공급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지금 많이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세수 여건에 따라서 매년 흔들리는 단년도 예산 구조로는 수년이 걸리는 인프라 공사를 공기 내에 마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미래산업 호황 세수를 과감히 적립해서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 취지에 대해서 여전히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그 의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한민국이 문명사적 대전환기뿐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이 재원을 정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안정 상태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투자에는 당연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그리고 조만간에 정부가 발표할 권역별·거점별 성장 엔진 그리고 향후 국가과학기술로 선정된 세븐 시드(Seven SEED)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면서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재, 대학과의 연계 그리고 정주여건의 개선과 함께 가야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변화율 추이 관련된 자료인데요. ‘추가세수’라는 단어가 사실 저도 좀 생소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가세 이런 내국세들의 결산 연평균 증가율을 기반으로 한 추세치의 초과분이다’, 좀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세수결손 연도가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 세수결손 연도가 포함이 되면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하락을 해서 추세치가 생각보다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왜곡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추가적인 보정기법이나 산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10년 치를 쓰는 이유는 현재 2025년, 올해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결산이 나와야 공적인 통계, 재정과 관련된 수치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저희는 그것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그다음 해에는…… 이렇게 계속 한 해씩 바뀌면서, 이것을 저희는 어려운 말로 이동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차 조금씩 올라가겠지요. 그런 것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저희는 1년, 2년 단위의 그런 급격한 변화를 이런 10년 추이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2020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특정 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서 보정하는 조금 더 세부적인 기법도 들어가서 추가세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10년 치 정도를 그래서 보게 됐다고, 5년이나 이삼 년도 아닌.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요 지금은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데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또 몇 년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 추가세수도, 초과세수도 발생하지 않는 해에는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기로 결정한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적립되지 않고 정채 상태가 발생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걱정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수 부진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과 미래 투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금 채원과 관련된 무슨 보장 방안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면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처럼 반도체 등 업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그리고 이게 내국세 여건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나 이런 적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향후 3년, 4년, 5년 후까지 완전히 내다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면서 이 기금을 운용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반도체 등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이 호황이 보다 지속되거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좀 더 이런 성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이 기금을 운용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준호 위원** 다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면서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자료를 좀 보시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정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적용하는 산식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 재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교육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듣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변동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현행 고정 연동제 기준 퍼센트가 20.79%인데 이 연동제를 유지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이 100조 정도에 이르는 데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79조 원 등이 배분되고 그 차액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면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산식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 교부금에 새롭게 법안에 반영이 돼서 쪽 추계를 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령, 제

가 아까 일인당 교육교부금도 지난 20년간 8.5%씩 올랐는데 향후 30년까지 10.1%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총액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약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게끔 이렇게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 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만들어 놔고요. 이 돈이 혹시 다른 데 쓰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염려들을 하셔서 미래대응기금 안에 교육·인재계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가 저희가 매년 여유재원을 포함해서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 조항에 국가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재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저희가 지원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놔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방금 지역인재와 관련된 계정을 별도로 신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교육감이 함께 모여 가지고 지역의 반도체와 관련된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협업을 하겠다라는 뉴스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재원들이 단순한 교육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남·광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AI·반도체 중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역 이공계 혁신 인재 양성 예산으로 확실히 연결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공개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교육부하고 저희가 교부금 개편으로 인해서 마련된 재원을 교육·인재 기금도 넣고 또 전남광주통합시에 대해 저희가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특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립대를 포함한 여러 지원 대책을 저희가 교육부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담아 놔는데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라든가 세븐 시드 또는 성장동력과 관련된 지방의 이공계 중심의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통합시와 함께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정준호 위원 방금 예산처장관께서 교육부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범부처, 유관부처들이 여러 부처가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응기금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한번 구성을 해서 직접 세부적인 현안도 챙겨 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호남권·충청권·영남권 이렇게 세 파트별로 각 담당해서 전담하는 곳들이 있고요. 총리실 같은 경우는 국토대전환추진단이라고 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정주여건, 교육이나 그다음에 문화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는 국토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트롤타워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정준호 위원** 총리님, 계속해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과 관련된 추진일지 PPT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날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총리실 주관의 행정통합 TF가 가동이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총리실 주관의 행정통합 TF가 가동된 지 반년이 넘었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당시 30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20조 원 재정 지원 기준은 빠져 있었기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특히 전남·광주지역의 의원님들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재정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박홍근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올해 저희가 지원 나가지 않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은 저희가 정부안을 8월까지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담길 것을 감안하여 역산해서 저희가 그동안 충실하게 내부 논의를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최대 5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내부 설계를 다 마쳤고 31일 날 총리님께서 주재하는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준호 위원** 얼마 남지 않은 공표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라는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뚜렷하게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재차 여쭙보게 된다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중앙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5조 지원책에 대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종합해 보면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국고 순증 재원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집행권이 보장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공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동안 충분히 들어 온 말씀들입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정준호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진정성을 밝히신 바 있으시지요?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 관련된 언급까지 했는데 연임 핑계를 대면서 개헌과 5·18 전문 수록을 지금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저도 참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한 역사적 과제에 대한 회피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 국정과제 1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헌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준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마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2차 가해가 있었고 또 잘 아시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5·18을 폼페이·왜곡하는 행사가 버젓이 열려서 질의하는 본 위원도 굉장히 참담한 심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데 이런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에서, 특히 총리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도심 한가운데에는 헌법 제정, 시민권 투쟁 역사를 집대성한 국립 헌법센터가 존재를 합니다. 프랑스도 파리 중심부 바스티유 광장에 7월 혁명 기념탑을 세워 전 세계에 본인들 국가의, 자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수도 서울에 K-민주주의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8, 부마항쟁, 제주 4·3처럼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고 하는 4·19 혁명에 더한 이러한 국가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두 망라해서 한번 상징하는 기념탑이나 공간을 서울에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주신 내용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도 오셨고 존경하는 국가보훈부장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가지고 관련된 예산까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조배숙 위원** 한미연합훈련 축소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시였는데 사전 통보가 없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 정보 당국자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서 인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제가 보니까 조현 외교부장관께서도 트럼프 대통령 SNS 보고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훈련을 축소하려면 연합훈련 하는 당사자한테는 좀 사전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무례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 행정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조배숙 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쨌든 간에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단독이 아니고 연합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양국이 협의를 해야 맞는 것이지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조배숙 위원 글썄요, 물론 지금 트럼프의 예측을 못 하는 행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PT 띄워 줘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는 ‘평화를 위한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결단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어느 나라 대통령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훈련 축소 상황을 가장 반겨야 될 쪽은 북한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장관님, 그 뒤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어떤 항의나 어떤 해명이나 이런 조치를, 해명을 요구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 뒤로 미 주요 인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논의를 했고 미 측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누구 좀 책임 있는 당국자로부터 무슨 사과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건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조배숙 위원 예?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뒤에요, 뒤에. 그 이후예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 이후에. 그렇지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조배숙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말이지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공화당·민주당 의원 가릴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북·중·러 밀착과 반미 연대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한미연합 대비 태세 축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한반도에서 직접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런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 정부가 걱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의회가 걱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여정을 보세요.

떠워 주십시오, PT를.

앞에서는 트럼프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이 낮간지러운 소리로 아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 자주 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면서 우리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굉장히 초조한 모양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차관입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안 계시나 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김정은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거기에서 좀 소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안보, 국가 운명이 걸린 건데 거기서 분명히 거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핵화 원칙이 핵 확장 억제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혹시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전략 비대칭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은 지금 미국과 어떤 접촉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외교 당국 간에는 이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장에 북·미 간에 직접적인 협상이나 접촉의 기미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나저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미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쪽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배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트럼프 진영의 돌아가는 움직임이랄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양쪽으로 봐야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대법원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신속한 재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왜 안 하십니까? 신속한 재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일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송지휘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대법원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소송지휘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또 아니면 해석의 문제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각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그거 장기 미제 카드 쓰고 있습니까? 선거 사건 같으면 6개월이면 장기 미제 카드 바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해당 재판부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5·18 수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참 중요한데 저는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화 운동, 자유화 투쟁은 6·25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25전쟁, 공산 압제로부터 자유를 지켜 내기 위한 그 투쟁의 정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25의 자유를 위한 투쟁 정신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필요한 부분들의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관련된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여와 야 모두 다 동의하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5·18은 공감대가 됐고 6·25 자유 투쟁 정신은 아직 공감대가 안 됐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5·18 관련해서는 여와 야 모두 다 동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6·25는 그러면 동의를 안 하시는 여당 의원님이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아니, 헌법에 수록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헌법에 수록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록한다면, 물론 개헌조차도 이프(if)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수록한다면 그러한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여쭙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가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부분은 저희 국정과제 1호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6·25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렇게밖에 안 읽히네요.

그 정도 하겠습니까.

법무부차관님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계속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장미란 씨 사건까지도 문제가 불거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법사위에서 여당 위원조차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놔뒀으면 될 일을 그걸 없애고 또 다른 방어수단을 찾는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법무부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미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다 뺏겨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뭘 하실 능력이 되십니까, 지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검사가 직접수사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어서 직접수사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보완수사 요구 제도와 그다음에 재수사 요구, 시정 조치 등을 통해서……

○김태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볼 게 있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김태규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를 끝내고 나중에, 마이크 안 꺼지실 거니까 그때 답변을 주시고요.

공판검사 숫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판검사 숫자가 대체적으로 한 15% 정도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한 15~20%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됩니까? 15%면 한 300명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중수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한 사람이 한 이백육칠십 명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 중에서는 한 100여 명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100여 명 된다고 그렇게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검찰 조직이 지금 작년 7월경 기준으로 2292명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중수청으로 갈 사람 그리고 공판검사로 실제 필요한 인력은 채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 다 빼고 나면, 그 인원을 합치면 한 550~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292명에서 이 정도 숫자 빼고 나면 거의 한 1500명 이상이, 그렇지요? 1500 정도 되겠지요? 그 인력들 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일선의 검사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현직 검사들이 한 2300명 안 됩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300명 빼고 2000명 되고, 그중에서 또 이번에 지원이 한 100명이었으면 19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1900명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검찰청이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들 예산만 1900명 직장 유지시켜 주려고 쓰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검사들이,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보완수사요구를 내려보내야 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수사요구 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결국에는……

○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더 길어지면 뒤에 분들이 있으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태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진해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보충질의는 제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한테 여쭙볼게요.

지금 기업투자가 800조 원으로 나와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호남은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확약’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 이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기업체가 확약을 한 사항은 아니겠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확약이란 단어를 말씀드렸다고……

○이종욱 위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냥 흘러 지나갔어요.

그러면 조건부 확약 이 정도 용어면 되겠습니까? 확약이란 용어 자체도 쓰기가 해당 기업체는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국무총리 한성숙 기업에서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결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더 강한 용어 같고 그 당시에 정부 발표 후에도 개별 기업체들은 별도 공시로 ‘이것은 변동 가능하다’ 이것을 공고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대규모 투자에 관련된 공시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넣는 것이 일반적·통상적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를 속도전·전격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변동 여지가 없느냐 하는 게 있고요.

지금 호남 반도체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 줘야 되는 게 뭐지요? 많이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입지와 용수 관련된 부분들, 인프라……

○이종욱 위원 용수, 발전, 부지 조성, 많이 있습니다. 주택도 해 줘야 되고 도로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산단도 만들어야 되고……

대충 투자비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정부가 해야 될 것? 민간은 800조잖아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정확히 제가……

○이종욱 위원 대충,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조 이상은 들겠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종욱 위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일정을 보면 27년 초에 산업단지 조성 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년 7월에 전력·용수 공급시설 착공, 2030년 6월에 반도체 양산 목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양산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기업체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역사업 해 오다 보면 하나하나 일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2027년에 착공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 내부에서 이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다 예타 면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스케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처들이 모으고 관련 일정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격전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정도 맞추기 힘들 거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미리 투자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삼성이나 SK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27년까지는 대체로, 27년 중반까지는 대체로 이 정도 갈 것 같다는 건데 27년 말만 해도 세계, 직접 돈…… 그렇지요? 수 천조를 쏟아붓는 사람들도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 주가가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확신은 못 합니다. 그래서 2027년 후반기부터는 모르는데 정부가 이렇게 투자하고 중간에 삼성이나 SK가 중도에 빠진다는지, 빠질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많은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도 상당한 위험을 투자하는 거고 만약에 하려면 기업하고 위약금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약속을 해야 되고 정부도 선투자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투자할 때는 기업체가 중도에 함부로 그만둘 수 없게 위약금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저는 AI하고 반도체가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확신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00% 전격전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부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금, 신축성 있게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큰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이진수 차관님,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셨습니까? 저는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었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왜 막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다 통과됐잖아요. 그럴 때 소신 있게 국익 지키라고 월급 받고 고위직 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 찬성 안 한다고 말하고 계엄 실행에 관여하면 면책됩니까? 저는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정무수석님,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합니다. 대법원의 위치는, 대법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 저는 대법원의 제청권을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제삼세계 후진국처럼 재판 결과를 전혀 수긍하지 못한다든가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든가 이런 상황 정도의 사법부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법……

○**한동훈 위원** 수석님,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짧아서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 결과는 존중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습니다. 이의는 있지만 결과를 존중해야 되지요.

공소취소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시는데요. 아직 재판 안 끝났잖아요. 그게 조작기소면 재판에서 당당하게 무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재판에서 다투지 않고 공소취소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한동훈 위원님께서도 검사 하셨고 법무부장관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알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작기소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 조작기소 확인된 게 없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 그리고 그것 막 돌리고 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까지 세금 쓰면서 이럴 필요 없이 자신 있으면 무죄 받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아니, 위원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진수 차관님,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표가 오늘 수리됐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한동훈 위원** 그리고 수리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건강이 대단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셨는데 정말 건강이 악화됐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법무부장관도 해 보고 국회의원도 해 봤는데 법무부장관을 못 할 정도의 건강으로는, 제가 해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국회의원 절대 못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조인드려요. 이 공소취소에 스킴기만 해도 나중에 계엄 수사 지금 당하듯이 패가망신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김만배 항소 포기까지도 했던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여기서 만세 부르고 도망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하신 거지요.

저는 이진수 차관께도 여쭙습니다. 공소취소 발 담갔다가는 패가망신당할 텐데 진짜 본인한테, 정성호 장관은 빠져나갔습니다, 본인한테 공소취소 하라고 하면 정말 그것 하고 그 패가망신의 길로 갈 겁니까, 아니면 본인도 사표 내고 도망갈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장관님께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병을 핑계 대고 장관직을 사직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청장 직무대행입니다.

○**한동훈 위원** 긴급체포한 그 경찰이 적부심 석방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체포영장 신청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추가로 그 직원의 잘못된 실종 처리가 확인이 돼서 이 직원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한동훈 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긴급체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적부심 풀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긴급성이……

○**한동훈 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차장님의 책임은 아니니까 제가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당 의원이 오늘 ‘이번 연쇄 실종 암장이 개인의 일탈인데 정권의 부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당 의원 의견에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한동훈 위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시스템의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동훈 위원** 장미란 씨 가족은 제주경찰에만 신고한 것이 아니라 7월 19일에 노원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별도로요. 그런데 거기서도 ‘직계가족도 아닌데 친척 언니를 신고하냐? 그냥 가출한 것 아니냐?’ 이런 대단히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일탈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 서울에서 받아서 그 사건을 제주로 이첩을 했고 그 이첩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 그 가족분의 말씀은 눈물로 호소해서 신고를 받아 줬던 것이고 당초에 신고를 받아 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국회 일정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위원** 신고자,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불문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게 의무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총리님,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동훈 위원** 세금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동산으로 증세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제 정상화라고 설명드릴 바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세수가 부족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총리님께 책임을 추궁하려는 취지는 아닌데 총리께서는 청문회 직전에 주택 세 채를 매각하셨어요, 급히. 굉장히 큰 결단이지긴 했는데, 그런데 총리님 같은 그런 큰 자산가가 아니면 2주택 가진 분들에게서는 그런 압박을 가지고 집을 줄이고 주택을 매각하려는 것은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고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개인의 사정들이 모두 다 다른 거고, 저에게 자산이 있어서 너는 펜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고 개인들 모두의 사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님, 이제 그만해 주시지요.

○**한동훈 위원** 제 말씀은 그런 비판의 취지가 아니라 어떤 그런 식의 몇 채를 가진 자산가가 몇 채를 파는 것과 단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집을 줄여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대단히 다르다는 점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 잘 들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고려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의 서지영 국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국무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PPT 다음 페이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줄곧 나왔습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지요. 그리고 많은 언론과 학계와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총리님,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회의가 있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자문회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입장은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왜 그것을 총리께서 파악을 못 하십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중차대한 법안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본인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왜 총리가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죄송합니다.

○서지영 위원 총리께서 국민들의 여론과 그리고 본인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그러면 자문위원회 저런 것 왜 만듭니까? 총리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문위 입장은 이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된다.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총리께서 관심도 두지 않으시면 앞으로 저런 자문회의 없애십시오. 뭐 하려고 만들어서 자문단 운영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보다는 그 내용들이 이미 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서지영 위원 결정됐다니요? 자문단의 회의 결과 이전에 이미 내용은 다 결정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미 형사소송법 관련된 부분들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 내용들은 제가……

○서지영 위원 개정이 진행되는 것은 그 마지막 단계는 대통령이 이 법안을 수용하는가 안 하는가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서지영 위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서지영 위원 이렇게 각계에서 많은 국민들과 학계와 전문가들과 그리고 수사에 참여하는 여러 검사들과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과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압도적 다수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총리님,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총리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입장 관련된 부분에서……

○서지영 위원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총리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붕괴를 가져온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셨군요.

국무위원 여러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때 여러분 거부권을 건의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저는 이미 충분히 논의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대면하여 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하에 권력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져 임계치에 이르면 그 권력 또한 붕괴됩니다.

특정 진영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복수를 위해 수많은 피해자의 삶이 걸린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학계, 언론, 전문가, 당사자, 국민 모두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자들과 이 악법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고 침묵한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모두 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던 피해자의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그 피맺힌 절규처럼 여러분들은 피해자를 공개하면서까지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는 그 유가족들을, 앞으로도 나올지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지영 위원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실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부분에, 권한남용의 폐해를 막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 공백이나 또 아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지영 위원 총리님,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했던 것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서지영 위원 여러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토론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 입장 마음대로 세제 개편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토론회 개최하셨으면서 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국민들의 의견 무시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통령 공약을 관리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

고를 받고 계십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공약이 제대로 실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 원인과 관련된 후속 대책을 준비…… 해당 수석실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검토해서 추가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부처랑도 연락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부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혹시 저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공약 중에 인천광역시와 신도-강화 남단 길상면 구간 다리 건설이라고 있는데 정무수석님, 들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제가 지역 공약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챙기시는 건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배준영 위원** 이게 오늘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안 계시지만 예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수도권과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밑에 영종하고 신도의 3.2km 다리가 있는데 저게 예타 면제로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건너다닙니다. 그러니까 서해평화도로의 1차 단계는 예타 면제로 했는데 저기를 건너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신도-강화, 저기 11.4km 있지요. 그런데 저거는 예타 면제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같은 사업인데 어떤 거는 예타 면제가 되고 어떤 거는 예타 면제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어차피 저게 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은 될 수도 있고, 이게 라인 구간별로 가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못 보지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따로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도 따로 놓고 있고 청와대하고 부처도 따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3개 정부에 걸쳐서 계속 국정과제이자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를 보니까요, 21년 5월 달에는 국도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에 국토부는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불수용했어. 24년도에 보면 12월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행안부는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불수용했어. 이러다 보니까 25년 7월에는 아예 그냥 국토부도 불수용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니까?

정무수석님, 대통령님 그 공약 챙긴다는 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이 상황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서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공약을 안 하는 게 낫지요. 여기 계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다른 게 또 있어서.

좀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에서 애써 주셔서 대청도 유희 해군기지가 이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정부안에 반영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해수부 입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국방부에서 흔쾌히 이렇게 내주셨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바다와 어항 관리 및 진흥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적이지가 않은데, 이게 국가어항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항내 기능을 재편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항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국가어항개발계획 반영으로 방향을 잡았고 지난 4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시 옹진군 이용단체와 협의해서 선진포항 어항 구역으로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촌·어항법 19조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 내용도 담아 있고 그런데, 국방부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왜 주민들을 위해서 해수부가 준비를 안 해 줍니까? 해수부장관님, 어떻게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이 상당히 근거를 갖고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돋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경기 화성율의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요. 법무부차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차관님, 예전에 2013년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억납니다.

○**이준석 위원**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절차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혐의점으로 처음에 시작된 건지 기억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때 통합진보당에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디 회합 자리에 가 가지고 폭탄을, 사제폭탄을 만드느니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 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무죄 나오고 다른 내란선동이나 이런 쪽에서 유죄가 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것 때문에 1심이 나오기 전에 바로 그 당시 정부, 박근혜정부지요,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당해산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게 인용되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때 8 대 1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8 대 1로 이렇게 인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대입해 가지고 한번 지금의 일들을 보고 싶어요.

예전에 보면…… 이게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국감에서 오늘 퇴임하시게 된 장관께서 이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그 뒤로 법무부 내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검토 같은 걸 따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 언론에서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 후에 법무부에서 별도로 검토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확실히 아무 자료나 아무 검토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 사실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때 결국에는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 음모지요. 그러니까 실행의 단계에 옮기지 못했으나 음모였다, 그게 인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해산에 이르게 된 것은 그분이 그 정당의 주요 간부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2024년 12월 있었던 계엄을 놓고 봤을 때 계엄은 실제로 실행되었지요.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실행되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내란으로 인정되었습니까, 재판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내란혐의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그래서 2심을,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을 앞두고 있지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주요 간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의 주요 간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정당이라 보기는 애매하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난번에 장관께서 1심 판결 결과나 이런 걸 보고 정당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검토가 안 됐다고 차관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심까지 나오고 내란재판의 결과가 맞다라고 나오면 법무부 내에서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헌정당해산심판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이준석 위원** 맞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과 같은, 13년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히 그와 같이 대입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란재판의 일부분이 상당히 선고가 됐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차관님, 판단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하는 것일 테고, 물론 이것을 청구하느냐 판단도 해야겠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내란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회합해서 음모를 애기한 사람, 하나는 실제로 내란을 행한 사람 그리고 정당

의 주요 간부 그리고 그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이렇게 되었을 때 형식논리상 진행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 당시 장관의 말이 단순한 말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위협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님, 이것도 한번 여쭙볼 것인 게요, 방금 법무부가 얘기했지만 법무부는 단순한 수행 주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별다른 토론 절차 없이 사실 그때 굉장히 빠른 절차로 전자결재를 통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황교안 총리의 회의 주재를 통해 가지고.

국무총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사건과 지금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문외한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이준석 위원 그 무게를 인식하셨으면 하는 생각인 게요,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재판청구 가능성이, 정성호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재직하실 때 이런 재판청구를 할까 고민했다라는 말씀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호인의 증언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차관과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엄중하고 조심스러운 절차로서 이것이 검토돼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정치권 일각에서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는 제기한 바가 있고, 당연히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그 후신 정당인 진보당에서 언급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정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항상 엄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분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시까지 착석한 위원님들의 명단을 한 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이진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허영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위원님들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 김호철 감사원장님,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회의록을 하시는 속기사분들, 의회 경호원분들, 국회방송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인 드골이라는 사람이, 드골 대통령이 있었는데 문화부장관을 당시에 유명한 좌파 문학자인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장관으로 선임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둘이 프랑스의 새로운 시대를 엮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제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하도 말썽을 부린다는 보고가 많으니까 사르트르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니깐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요, ‘그도 프랑스다’.

우리가 오늘 서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있구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걸까 이렇게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시02분 산회)

○출석 위원(43인)

강경숙	권향엽	김교홍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태규	김 현	문대림	박상웅
박수영	박용갑	박정하	朴芝源	배준영	백선희	서지영	송언석	송재봉	안도걸
여기구	엄태영	유상범	윤용근	윤재옥	이건태	이광재	이기현	이연희	이인선
이종욱	이준석	임이자	임호선	정준호	정태호	조배숙	조인철	한동훈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출장 위원(5인)

강대식 김성희 나경원 전진숙 최기상

○청가 위원(2인)

김선교 정혜경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윤

입법심의관 이윤국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고용진

입법차장 정명호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임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한성숙

대통령비서실

실장 강훈식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감사원

원장 김호철

기획조정실장 이운재

국무조정실

실장 임기근

국무2차장 김용수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채이배

정무실장 서은숙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정책기획관 전영수

교육부

장관 최교진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정책기획관 김홍순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조정기획관 조기중

통일부

장관 정동영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국방부

장관 안규백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정책기획관 이지성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정책기획관 황의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정책기획관 김권영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기획조정실장 김헌정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기획조정관 이형석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
 법제처
 처장 조원철
 기획조정관 안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기획조정관 우영택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기획조정관 양순필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기획조정관 박현희
 국세청
 청장 임광현
 기획조정관 유재준
 관세청
 청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기획조정관 장홍태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김인환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송호영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기획조정관 채수희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임영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획조정관 장호연
기상청
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김동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문성요
기획조정관 정인권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기획조정관 조영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임시회의록

기획조정관 성종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겸증권선물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부위원장 이정렬

사무처장 양청삼

기획조정관 서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기획조정관 김기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사무처장 최수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이호중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사법정보화실장 김우현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성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2026. 7. 27.
김민전	강대식	국민의힘	2026. 8. 6.

○의안 회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79)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80)

이상 2건 8월 24일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79)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의 예비심사기간을 8월 24일 9시 30분
까지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80)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기획·교육·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
교통)의 예비심사기간을 8월 24일 9시 30분까지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